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아동가족학 석사 학위논문

OECD 국가의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 정 민

OECD 국가의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지도교수 진 미 정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 정 민

박정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이 재 림 (인)

부위원장 김 경 민 (인)

위 원 진 미 정 (인)

국 문 초 록

국가는 가족정책을 통해 가족의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가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특히, 가족정책은 아동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을 주로 포괄하므로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가족정책과 아동의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아동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다양한 가족정책의 조합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는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족정책이 어떻게 조합되어 제공될 때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가?'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정책에 해당하는 9가지 지표를 포함하였다. 현금지원 정책으로 (1)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 (2)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 서비스지원 정책으로 (3)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 (4)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 휴가지원 정책으로 (5)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공지출 금액, (6)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7)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8) 어머니 소득 전액보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9) 아버지 소득 전액보존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 아동 삶의 질에는 건강 측면의 삶의 질 지표인 (1) 저체중아 출생비율, (2) 영아사망률, 경제 측면의 삶의 질 지표인 (3) 아동가구빈곤율, 시간 측면의 삶의 질 지표인 (4)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량과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OECD Family Database와 Child Well-Being Data,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시간량 자료를 활용하며,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방법은 각 사례의 특성 간 상호작용의 효과를 완전히 허용하는 결합적 인과성 구조를 가정하기 때문에,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한 가족정책을 검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여러 정책 간의 결합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조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가구빈곤율에 있어서만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동가구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1)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높고 2)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높은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충분조건 분석을 통해 검증하며, 그 결과는 아동의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삶의 질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건강 측면의 아동 삶의 질이다. 우선 저체중아 출생비율의 경우, 국가가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휴가 공공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모의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낮았다. 또한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높은 소득대체율과 함께 국가의 적극적인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 지출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으면서 국가의 현금지원도 소극적인 경우라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해 높은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며 아버지에게 긴 소득보존 기간, 그리고 적극적인 서비스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이 소극적인 경우에도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비중이 높고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모두 활발하다면 어머니에 대한 휴가지원과 상관없이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아사망률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보다는 어머니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 전액보전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적극적인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의 공공지출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측면의 아동 삶의 질은 어머니에 대한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경우와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선 현금지원에 공공지출이 낮더라도 어머니 휴가지원이 적극적이고, 휴가지원에 공공지출이 높을 때 아동가구빈곤율이 낮았다. 반대로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경우에는 휴가지원에 공공지출이 낮더라도 현금지원이 활발한 조건이 결합된다면 아동가구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모두 소극적이어도, 맞벌이 대상 현금지원이 적극적이거나, 아버지의 소득대체율을 통해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동시에 서비스와 휴가지원에 공공지출을 적극적으로 펼필 때 해당 국가의 아동가구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은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에서만 유의한 가족정책 원인조합이 도출되었다. 이는 가족정책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자녀의 시간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오히려 현재 OECD 국가의 가족정책 지원수준이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에는 부족한 수준임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와의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합으로,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할당 기간이 길면서 가족에 대한 현금, 서비스, 휴가지원이 모두 적극적인 조합이 도출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낮은 소득대체율과 짧은 유급휴가기간을 가지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모두 적극적인 조합이 형성될 때 해당 국가의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의 실효성을 제언하였다.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가족정책에 아동중심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퍼지셋 질적비교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합을 밝혔다. 즉, 높은 아동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가족정책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가족정책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결합을 통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가족정책, 아동 삶의 질, OECD 국가, 국제비교,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학 번 : 2020-26643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문제 ····· 5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 7
제 1 절 가족정책과 국제비교 ····· 7
1. 가족정책의 범위 및 분류 ····· 7
2. 가족정책의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9
제 2 절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 ····· 14
1. 아동 삶의 질의 개념 ····· 14
2.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 ····· 15

제 3 장 연구방법 ····· 21
제 1 절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 21
제 2 절 주요 변수 ····· 23
1. 가족정책 ····· 23
2. 아동 삶의 질 ····· 25
제 3 절 분석 방법 ····· 29

제 4 장 연구결과 ····· 35
제 1 절 진리표 ····· 35
제 2 절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 ····· 44
1. 필요조건 검증 ····· 44
2. 충분조건 검증 ····· 46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61

참고문헌 ····· 68
Abstract ····· 83

표 목 차

<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27
<표 3-2> 수준기표에 따른 필요조건, 충분조건의 해석 ····· 32
<표 3-3> 분석 모델 ····· 34
<표 4-1> 언어의 수리적 표현 ····· 38
<표 4-2> 퍼지셋 분석을 위한 원인조건의 원점수 ····· 39
<표 4-3> 퍼지셋 분석을 위한 원인조건의 퍼지점수 ····· 40
<표 4-4> 퍼지셋 분석을 위한 결과조건의 원점수 ····· 41
<표 4-5> 퍼지셋 분석을 위한 결과조건의 퍼지점수 ····· 42
<표 4-6> 퍼지셋 분석을 위한 최종 진리표 ····· 43
<표 4-7> 필요조건 분석 결과 ····· 45
<표 4-8> 저체중아 출생비율에 대한 충분조건 원인조합의 축약결과 ····· 48
<표 4-9> 영아사망률에 대한 충분조건 원인조합의 축약결과 ····· 51
<표 4-10> 아동가구빈곤율에 대한 충분조건 원인조합의 축약결과 ····· 55
<표 4-11>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에 대한 충분조건 원인조합의 축약결과 ····· 59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모형 ····· 6
<그림 2-1>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 ····· 17
<그림 3-1> 연구 절차 ····· 30
<그림 3-2> 높은 아동 삶의 질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 32
<그림 4-1> 저체중아 출생비율 국가별 충분조건 결합 형태 ··· 49
<그림 4-2> 영아사망률 국가별 충분조건 결합 형태 ····· 52
<그림 4-3> 아동가구빈곤율 국가별 충분조건 결합 형태 ····· 56
<그림 4-4>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 국가별 충분조건 결합 형태
····· 6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탐색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족정책의 결합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정책이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을 그 대상으로서 지원하는 직·간접적인 정책과 법을 포괄한다. 이 연구는 어떤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가 높은 아동 삶의 질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일한 가족정책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가족정책이 어떻게 결합하여 아동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가족은 아동이 한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시체계이자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모든 가족, 모든 아동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에서의 상이한 경험은 개인 간에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빚는다(Duncan & Murnane, 2016; Lundberg et al., 2016). 이 때 국가는 가족정책을 통해 서로 다른 가족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가족정책은 이러한 점에서 가족이 존재하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거시체계이다(Berger & Carlson, 2020).

아동 삶의 질은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 및 담론”으로(Ben-Arieh et al., 2014), 아동의 생존과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한 객관적인 삶의 질(objective indicators)과 아동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느끼는 인식, 평가, 열망에 대한 주관적인 삶의 질(subjective indicators)로 나누어진다. 객관적 삶의 질은 발달을 위한 아동의 환경(well-becoming)과 아동의 현재 상태(well-being)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공인숙, 김선영, 2012), 아동이 현재 자신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에 주목하는 주관적 삶의 질 또한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재화가 안정되어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아동 삶의 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합의를 거친 지표를 근간으로 한다(Bradshaw et al., 2007; UNICEF, 2007; 2009; United Nation, 1989). UNICEF(2009)에 따르면, 아동 삶의 질에는 '물질, 주거 및 환경, 교육, 건강과 안전, 위험 행동, 학교생활'의 여섯 가지 차원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에 주목한다. 건강은 아동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UNICEF의 아동 삶의 질 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는 UNICEF의 아동 삶의 질 지표 중 아동의 물질적 웰빙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에게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환경 중 하나로, 가족의 생활 조건은 아동의 건강과 경제의 불평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Hoffmann et al., 2022). 마지막으로 시간은 아동을 둘러싼 관계와 환경을 드러내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 또한 아동의 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Baker et al. 2008; Loeb et al. 2007),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연구 필요성을 갖는다. 첫째로, 가족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출산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일과 삶의 균형, 경제적 자원과 양육비용을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어(Berger & Carlson, 2020; Daly & Ferragina, 2018; Duncan & Irwin 2004; Lewis, 1997; Sainsbury, 1996),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에 비해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 내 아동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가족정책은 가족 안에 아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근로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아동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가 갖는 돌봄의 관계에 따라 부모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둘째, 국가 간 비교의 방법으로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삶의 질 지표는 한 사회에서 측정된 지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석하는데 상대적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상대적 비교 대상으로서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는 것은 가족정책과 아동의 삶의 질이 서로 다른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그 관계 또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점에서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킨다(박종일 외, 2010). 가족은 이용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여러 조건을 비교하여 가족에게 필요한 최선을 선택하기 때문에 개별 가족이 어떻게 가족정책을 사용하는가는 국가가 제공하는 가족정책 지원 수준, 서비스의 질, 소득대체율 등 조건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이 양육수당을 받을 것인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인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것인지는 각 정책의 지원 수준, 서비스의 양과 질, 소득대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비교를 통해 아동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제비교란 비교연구의 방법론 중 하나로, 한 사회에 대한 일회성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김신영, 백혜정, 2008).

셋째, 단일한 정책을 가진 국가는 없기 때문에, 가족정책으로 포괄되는 관련 정책들이 서로 밀접하게 맞닿아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 현실세계에서 작용하는 과정은 단순히 변수 중심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여러 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이승윤, 2014). 따라서 국가 간 가족정책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단일정책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서로 다른 조건이 결합하여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는 사회 현상을 드러내기 위해 계량적 분석과 질적 분석 그리고 역사적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안상훈, 2002). 회귀분석과 같은 계량적 방법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며, 소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 및 역사적 접근은 개별 사례의 특수성에 관심을 둔다. 일반적으로 양적 분석에서는 개별 사례보다 변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며, 질적 분석에서는 개별 사례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국가 간 비교에서는 국가별 사례를 드러내면서도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장점을 모두 보여줄 필요가 있다. 퍼지셋 질적비교방법은 각 사례의 특성 간 상호작용의 효과를 완전히 허용하는 결합적 인과성 구조를 가진다. 즉,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정책들이 원인조건이라고 할 때, 원인조건들의 상이한 조합(결합조건)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목적을 가진다. 이 연구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가족정책과 아동의 삶의 질의 관계를 검증하고, 향후 가족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아동의 삶의 질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부의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의 실효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가족정책에의 투자에 기여하고, 가족정책에 있어 아동중심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족정책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어떤 조합을 통해 아동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은 무엇인가? (필요조건 검증)

[연구문제 2] 가족정책이 어떻게 결합할 때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가? (충분조건 검증)

본 연구에서 가족정책은 현금, 서비스, 휴가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아홉 가지 가족정책, 아동 삶의 질은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이 포함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 사이의 필요조건을 검증하는 것으로,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을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가족정책이 어떻게 결합할 때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지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 사이의 충분조건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 중범위 사례를 가진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중범위 사례란 10-40개의 사례를 가진 연구를 의미하며, 양적연구로 접근하기에는 표본의 규모가 작고,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례수로 인식되어 사회과학연구의 방법론적 사각지대로 여겨진다(김진욱, 최영준, 2012; 최영준, 2009).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집합관계를 이용해 같은 결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정책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두 연구문제를 통해 가족을 단위로서 지원하는 정책이 서로 다른 국가의 아동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 모형

가족정책		아동 삶의 질
• 현금정책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 • 서비스정책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 • 휴가정책 아동 1인당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어머니 소득 전액보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아버지 소득 전액보존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	• 건강 저체중아 출생비율 영아사망률 • 경제 아동가구빈곤율 • 시간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량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가족정책과 국제비교

1. 가족정책의 범위 및 분류

가족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Kamerman과 Kahn(1976; 1979)은 가족정책을 '정부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가족정책을 제정과 시행 방식에 따라 명시적 정책과 묵시적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명시적 정책에는 가족을 그 대상으로서 직접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이 포함되며, 묵시적 정책의 경우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정책의 실행 과정이나 결과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Zimmerman(1988)은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 가치보다 최우선적인 정책 목적으로 선택하는 정책을 가족정책이라고 보았다. 진미정(2015) 또한 가족정책이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가족의 복지라는 목표 하에 명시적으로 가족문제를 다루는 정책과 법률을 가족정책이라고 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가족정책을 '가족구성원의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고, 가족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정의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06). 이 연구는 Zimmerman(1988)과 진미정(2015)의 정의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안녕과 복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을 그 대상으로서 지원하는 직·간접적인 정책과 법률을 가족정책으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Kamerman과 Kahn(1979)은 가족정책의 묵시적 정책에는 인구정책, 소득이전(移轉)정책, 주택정책, 의료정책, 환경정책, 이민정책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명시적 정책에는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공공부조, 조세혜택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Bradshaw et al(1993)과 Gauthier(1996)의 경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수당, 아동소득공제, 보육정책 뿐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와 조세, 주택, 교육, 의료제도를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규정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가족 혹은 아동에 대한 수당, 출산 및 육아 급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육아휴직제도,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보육 또는 양육에 대한 서비스 등의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다루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안승재, 2021; Gauthier, Koops, 2018; Kamerman, 2009; Rostgaard, 2014).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협의로서의 가족정책이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고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더 적합하다고 본다. 즉, 이 연구는 Kamerman과 Kahn(1979)의 명시적 가족정책의 제한적 정의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명시적 가족정책을 다루는 연구들은 가족정책을 1) 현금 지원 2) 서비스 지원 3) 시간관련 지원 정책으로 분류한다(정진화 외, 2019). 첫 번째로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가구소득이나 가구규모, 그리고 가구의 구성에 따라 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가족수당 및 아동수당의 형태로 지급된다(OECD, 2022a). 두 번째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는 유아교육, 보육서비스, 취학 전 보육시설이 포함되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공공 재정지원이 있다(Adema & Fron, 2019).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시간관련 지원 정책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포함된다. 부모가 고용과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으며 자녀양육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2. 가족정책의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2000년대 이후 가족정책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는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적 의제인 저출산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고, 자녀 양육과 모성보호, 그리고 일가족양립정책을 강조하는 가족정책에 대해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유계숙, 2007). 해외 연구의 경우,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무엇이 가족정책인지에 대한 개념 연구와 가족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Berger & Carlson, 2020). 이후 연구들은 가족정책의 효과로 출산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일과 삶의 균형, 경제적 자원과 양육비용을 주요하게 살펴보았고, 그 외에도 동거, 결혼, 이혼, 성평등과 가족정책이 관련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Berger & Carlson, 2020; Daly & Ferragina, 2018; Duncan & Irwin 2004; Lewis, 1997; Sainsbury, 1996).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국제비교 연구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의 연구 동향을 보였다. 첫 번째는 개별정책의 지출 수준이나 화향력을 탐색한 연구이다.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특정한 정책에 대해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자료를 이용해 수준을 지표화하고 해당 지표가 갖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OECD Family Database는 GDP 대비 OECD 국가별 지출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활용한 정진화 외(2019)의 연구에서는 가족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라는 개별정책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정책들이 각국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가 양성평등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Castro-García & Pazos-Morán, 2016; Kvande & Brandth, 2017)와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Olivetti & Petrongolo, 2017)도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뒤 각 유형을 평가하거나 효과를 규명한 연구이다. 가족정책을 탈가족화, 지원수준, 복지체제 유형 등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을 평가하거나 각 유형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Fleckenstein와 Lee(2017)의 연구는 한국, 일본, 대만의 가족정책이 어떻게 확장해왔는지 '탈가족화'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평가하고, 가족정책 확장의 정치적 유인과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규명하였다. 또한 Nordenmark(2021)은 European Social Survey Program(ESS)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족정책을 지원수준에 따라 지원수준이 높은 노르딕 맥락(Nordic context)과 지원수준이 낮은 보수적 맥락(Conservative context) 및 자유주의적 맥락(Liberal context)으로 유형화를 실시하고, 각 유형이 부모의 출산의향과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가족정책의 국가별 맥락은 주로 어머니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쳤으며, 출산의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세아(2020)의 경우 가족화, 탈성별화, 탈가족화의 세 기준에 따라 복지체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연구 결과 한국사회에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탈성별화와 탈가족화를 지향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재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개별정책이 출산율, 양성평등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들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각의 개별정책에 타당성을 부여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정책에 대한 유형화 연구는 복지유형이나 가족정책의 방향성에 따른 각국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개별정책이 갖는 효과에서 더 나아가 유형에 따른 가족정책의 효과를 통찰력 있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별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과 유형화의 연구 모두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다양한 정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예를 들어, Wesolowski와 Ferrarini(2018)의 연구는 가족정책을 전통가족 지원정책(아동수당, 결혼지원금 등)과 근로부양자 지원정책(유급육아휴직, 공공보육서비스 등)으로 분류하였고, 전통가족 지원정책에 비해 근로부양자 지원정책이 높은 출산율과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전통가족 지원정책과 근로부양자

지원정책은 단일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가족 지원정책이나 근로부양자 지원정책에 속하는 여러 정책이 모두 출산율과 일관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즉, 근로부양자 지원정책에 속하는 모든 정책이 출산율과 일관된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형화 연구에서는 유형에 속하는 개별 정책의 효과를 간과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라고 해도, 공공보육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는 경우와 반대로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지만 공공보육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아동수당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정책 안에 있는 개별 정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고려해 가족정책의 효과를 통찰력 있게 살펴보면서도 유형화 연구에서 간과할 수 있는 개별 정책의 효과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가족정책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정책 국제비교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통해 이에 포함되는 정책을 정하고, 이를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국가 간 비교의 방법으로 가족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함에 따라 국가 혹은 지역마다 가족을 정의하는 범위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가족정책을 규정하는 것부터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한다. 가령 다양한 파트너에 의한 출산, 공동양육, 조손가족과 다세대 가구, 한부모 아버지 가정, 동성 부모, 이민자 혹은 미등록 가족 등의 가족정책이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Berger & Carlson, 2020).

또한 정책이 동일한 목적이나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수준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라는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 간 상이한 구성 형태와 수준을 가지고 있다(법제처, 2019). 우리나라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남녀가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지만, 영국의 경우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3주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공동육아휴직, 무급유아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휴직이 규정되어 있다. 공동육아휴직은 산모와 배우자가 16주의 출산휴가를 4주까지 공유할 수 있는 제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기한을 지키는 한 부부가 자유롭게 휴직 기간을 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육아휴직이라는 가족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의 지원 대상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할당되어 제공되거나 부모 공동으로 제공될 수 있고, 자녀의 연령 제한 또한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수준도 육아휴직 기간이나 급여의 측면에서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족정책을 국가 간 비교할 때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지원수준(기한 및 급여),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의 지출 수준이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가 간 상이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가족정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태도가 다를 수 있다(Barbier, 1990).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출수준이나 국민들의 정책 활용률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해 스웨덴, 영국, 한국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를 실시한 홍승아(2010)는 가족정책이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스웨덴의 경우 가족정책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정책 사용, 취업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한 높은 소득대체율 등을 강조하며 1970년대부터 보편적인 권리로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이렇듯 오랜 세월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스웨덴은 광범위한 보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도 그 기간과 급여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남녀가 함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성할당제(daddy quota)를 도입하여 남성의 의무사용 또한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은 국민들의 정책 인지도, 제도 시행여부, 이용경험에 큰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활용을 비교해보면, 스웨덴은 91.5%의 기업이 부성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남성의 72.2%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46.1%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3.6%의 근로자가 실제 정책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정책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볼 때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해 활용률과 국가의 지출 수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국제비교의 시각에서 가족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유무뿐만 아니라 정책의 지원 대상, 지원수준, 지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며, 정책을 '변수'로 간주해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맥락과 상황을 반영해 해석해야 하고, 각 국가를 '사례'로서 살펴보는 접근 또한 필요하다. Ragin(1987)과 안상훈(2002)은 비교사회정책 연구를 변수중심적(variable-oriented) 방법론과 사례중심적(case-oriented) 방법론으로 구분했다. 변수중심적 접근은 각각의 사례보다는 사례가 가진 특정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살펴보는 반면, 사례중심적 접근은 사례 각각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보다는 서로 다른 변수들이 그 사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의 다양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국가 간 가족정책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변수중심적 접근과 더불어 사례중심적 접근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

1. 아동 삶의 질의 개념

아동의 삶의 질은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주목받아왔다. 아동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제시한 Ben-Arieh과 동료들(2014)은 아동의 삶의 질을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 및 담론”으로 정의하였다. 삶의 질은 아동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Pollard & Lee, 2003), 아동의 다차원적 발달과 건강 및 영양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아동 삶의 질을 단일한 차원의 지표로 보는 것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삶의 질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과 같은 인권조약에서 잘 드러나는데, 아동의 주거, 물질적 행복과 박탈, 건강, 인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교육과 보살핌(Bronfenbrenner, 1979; UNICEF, 2013),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및 평가를 다루는 주관적인 차원(Chandy et al., 2021)이 아동 삶의 질에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된다.

아동 삶의 질은 아동의 생존과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한 객관적인 삶의 질(objective indicators)과 아동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느끼는 인식, 평가, 열망에 대한 주관적인 삶의 질(subjective indicators)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객관적 삶의 질은 주로 아동의 빈곤과 물질적인 재화 수준(Bradshaw, 2006; Martorano et al., 2013)을 측정하며, 그 외에도 아동의 건강과 안전(Rosenzweing & Schultz, 1982; Ruhm, 2000), 교육(Engster & Stensöta, 2011) 등을 다룬다. 주관적 삶의 질은 아동이 현재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포함한다(Andrews & Withey, 1976; Bradshaw et al., 2011; Keyes et al., 2002; Rees et al., 2020). 아동의 객관적 삶의 질은 아동의 미래를 위한 환경(well-becoming)으로, 현재 아동의 상태(well-being)를 드러내기 위해서

는 아동이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평가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Bradshaw et al., 2013; 김미숙 외, 2018; 황은정, 장혜림, 2015). 하지만 객관적 삶의 질은 발달을 위한 아동의 환경(well-becoming) 뿐만 아니라 아동의 현재 상태(well-being)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공인숙, 김선영, 2012), 아동이 현재 자신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가에 주목하는 주관적 삶의 질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재화가 안정되어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과 아동의 객관적인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

생태체계이론을 통해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를 밝힌 Bronfenbrenner(1979)는 아동은 진공상태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발달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Bronfenbrenner가 말하는 사회적 맥락이란 아동을 둘러싼 정책과 법률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포괄하는 거시체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따라 Bradshaw(2014) 또한 아동의 삶의 질은 사회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는 Family Investment Model(가족투자모델)과 Family Stress Model(가족스트레스모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Hoffmann et al., 2022). Family Investment Model은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자원은 가족의 경제적, 교육적, 직업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동의 신체, 감정, 행동 등의 삶의 질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Family Stress Model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심리적인 고통을 악화시켜서 부모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이것이 결국 양육의 질을 떨어트려 아동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Panico와 Kitzmann (2020)은 가족정책이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는 <그림 2-1>와 같이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 첫 번째로 가족정책이 아동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는 아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아동보육이나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Heckman과 동료들은 이와 같이 아동의 발달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가진 효과를 설명하면서, 정규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아동을 지원하는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프로그램이 정책 투자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기라고 보았다(Heckman, Carneiro, 2003). 두 번째는 가족정책이 간접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족정책이 가족과 부모에 영향을 미치며(가계 소득, 부모의 삶의 질, 부모의 고용 상태 등),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동의 빈곤이나 물질적 웰빙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Baxter & Smart 2011; Cummings & Davies 1994; Daly & Ferragina, 2018; Engster & Stensöta 2011; Flaquer 2014; Huerta et al., 2013; Leo´n & Migiliavacca 2013). 예를 들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으로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고 간접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 가족정책은 명시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아동을 가진 부모를 지원한다. 따라서 반대로 가족정책의 목표를 설계할 때, 아동의 삶의 질 개선에 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Moreno Minguez, 2017).

<그림 2-1>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
Mechanisms family policies may influence child 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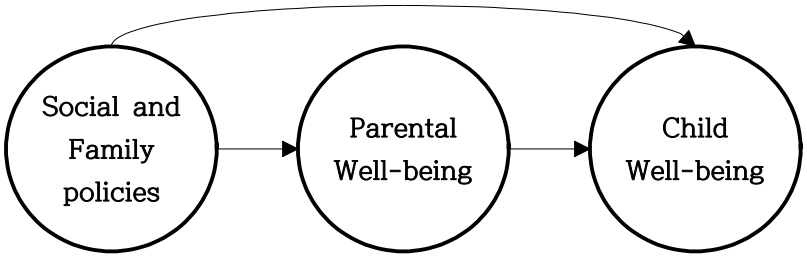


그림 출처: Panico, Kitzmann (2020).

가족정책과 아동의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Engster와 Stensöta(2011)은 국가별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동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본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연구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 사이의 광범위한 상관관계(note some broad correlations) 제시하여 국가별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정책들 간에 차이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ngster와 Stensöta(2011)는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가족 관련 수당, 세제혜택, 육아휴직, 보육서비스의 가족정책이 아동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동의 삶의 질을 아동 빈곤, 아동 사망, 아동의 교육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유급육아휴직과 공공보육서비스를 포함하는 맞벌이 가구 정책(dual-earning policy regime)이 낮은 아동 빈곤과 아동 사망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교육 역량을 높이며, 육아휴직과 재정정책은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육아 및 교육에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에 관계는 아동의 건강, 경제, 시간의 측면의 영향에 주목한다. 첫째로, 아동에게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환경 중 하나로, 사회생태이론(Socio-ecology theory)에서도 가족의 특성과 생활 조건이 아동의 건강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Hoffmann et al., 2022).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이 아

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가족의 소득불평등과 아동의 건강은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llison et al., 2007; Lynch et al., 2001; Macinko et al., 2004; Muntaner et al., 2002; Navarro & Shi, 2001; Navarro, 2004; Wennemo, 1993). 즉, 가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가구소득을 증가시켜 아동의 발달과 건강, 그리고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Cooper & Stewart, 2021, Washbrook et al., 2014, Burnett & Farkas, 2009). Duncan et al.(2017)의 연구 또한 부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아이들의 개선된 주거와 건강한 식단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건강 측면에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보육지원(보육 보조금 및 보육서비스)은 부모가 안전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서 아동의 사고 및 사망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Gornick & Meyers, 2003; Heymann, 2006), 가족 서비스에 대한 높은 지출 또한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도 하였다(Tanaka, 2005). 부모의 유급 휴가 및 휴직의 경우에도 아동의 건강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uhm, 2000; Tanaka, 2005; Winegarden & Bracy 1995), 유급 휴가 및 휴직은 아동의 출생 후 재-입원을 감소시키며,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의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아동 빈곤을 퇴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는데, 그 영향으로 유럽연합(EU)과 유엔 전략문서(UN strategic documents)에서도 아동빈곤을 감소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 2021). 아동가구의 빈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아동 빈곤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이전(移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Bradbury & Jantii 1999, 2001; Gornick & Jantti 2010; UNICEF 2005).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과 세금 혜택은 대표적인 사회적 이전의 하나로, 가족 소득을 향상시키고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가족정책으로 밝혀진

바 있다(Immerboll et al., 2000; Misra et al., 2007). 또한 아동 빈곤의 원인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Haider, 2021), 아동수당은 재정적 지원의 대표적 방식인데,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물품에 아동수당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어 아동의 빈곤 위험을 완화한다(Kooreman, 2000). 뿐만 아니라 유급 휴가 및 휴직과 공공보육에 대한 수준 높은 지원도 아동의 빈곤과 높은 관련을 가진다. 유급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지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는 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족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 때 공공보육에 대한 수준 높은 지원이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Ferrarini, 2006).

셋째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닌 돌봄(non-parental care)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r et al. 2008; Loeb et al. 2007). 즉, 해당 연구에서는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급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낮추고 인지발달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가족정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 세금 혜택이 자녀와의 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검증한 연구가 존재한다(Milligan & Stabile 2009, Gonzalez, 2013).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Gornick와 Meyers(2003)의 연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에 있어 성 격차를 해소하여 자녀가 아버지와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의 휴가/휴직 사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Hook(2006)은 국가 간 비교의 방법으로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시간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출산휴가와 같이 여성을 일에서 해방시키는 정책이 오히려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시간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반대로 남성의 휴가/휴직 사용은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시간을 증가하

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간 측면에서 아동 삶의 질을 드러내기 위한 지표로 아동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량,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을 따로 살펴볼 예정이고, 각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정책의 결합조건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분석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와 Child Well-Being Data, 그리고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2014년 시간량 자료이다. 첫째, OECD Family Database에는 (i) 가족의 구조(structure of families), (ii)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iii) 가족과 아동을 위한 공공정책(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iv) 아동결과(child outcomes)의 네 가지 차원 하에 70가지의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단위 데이터이다(OECD, 2022b). OECD Family Database는 OECD 국가들 간의 가족 실태와 가족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단위 데이터로, OECD Family Database에 포함된 정책 관련 지표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가족정책의 산출물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역으로 가족정책의 과제를 파악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진미정, 2012). 이 연구에서는 '(iii) 가족과 아동을 위한 공공정책'에서 제시하는 OECD 국가 별 가족정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둘째, OECD Child Well-Being Data는 아동 삶의 질을 보여주는 5가지 차원의 22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OECD, 2022c). OECD Child Well-Being Data에 제시된 아동 삶의 질의 차원은 (i) 가정 및 가족 환경(home and family environment) (ii)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 (iii) 교육 및 학교생활(education and school life) (iv) 활동 및 삶의 만족도(activities and life satisfation) (v) 아동 정책(child policies) 다섯 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ii) 건강과 안전'에 포함된 low weight birth와 infant mortality에서 아동 삶의 질의 건강 지표를, '(i) 가정 및 가족 환경'에 포함된 children in relative income poverty에서 아동의 경제 측면 지표를, parental time with children에서 아동 삶의 질의 시간 측면

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셋째,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2014년 시간량 자료는 OECD Child Well-being Data의 부모와의 시간량의 값에 한국의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생활시간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가 2019년임에도 2014년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그 이유는 OECD Child Well-being Data에서 국가별로 조사된 연도가 상이하며, 199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조사되어 해당 조사연도의 범위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OECD Child Well-being Data의 어머니,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 변수에 대한 조사 연도는 다음과 같다: 에스토니아(1999-2000년), 슬로베니아, 스웨덴(2000-2001년), 독일(2001-2002년), 라투비아(2003년), 폴란드(2003-2004년), 덴마크(2001년), 벨기에, 아일랜드(2005년), 호주(2006년), 일본, 이탈리아(2008년), 오스트리아(2008-2009년),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2009년), 노르웨이(2010년), 한국(2014년), 영국(2014-2015년), 미국(2016년).

분석 대상 국가는 결측치 없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한 OECD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OECD 국가는 경제 발전과 정부의 구조에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지만, 가족정책에는 차이가 있어서 가족정책의 효과를 비교하기 용이하다(Engster & Stensöta 2011). 또한 결측치가 있는 국가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방법론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비교연구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퍼지소속점수(Fuzzy Membership Score: FMS)를 산출 시, 개별 사례의 변수값은 전체 사례의 최대값, 평균값, 최소값 등을 기준으로 조정(calibr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전체 사례 중 결측치가 존재할 시 최대값이나 최소값 상의 편의(bias)가 발생하여 FMS가 왜곡될 수 있다(김교성, 유희원, 2015; 한신실,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에서 결측없이 본 연구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0개의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 심의면제를 승인받았다(IRB No. E2205/002-006).

제 2 절 주요 변수

1. 가족정책

본 연구의 원인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정책은 현금정책, 서비스정책, 휴가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연구에 포함된 모든 가족정책은 OECD Family Database에서 추출되었으며,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최근 연도(latest available)에 공개된 값을 사용하였다. 첫째, 현금정책에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2017-2019년)과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2018년)이 포함된다.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현금지원(아동수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지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 세금 감면 혜택(아동가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을 포함하는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의미한다[1].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란, 맞벌이 가족에 대한 공적이전금액(移轉)으로, 아동수당, 가족수당, 가족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수당의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비중(%)을 의미한다[2].

둘째, 서비스정책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

1) Child-related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which includes child allowances (which are sometimes income-tested, and with payment levels that in some countries vary with the age or number of children, public income support payments during periods of parental leave, and, in some countries, income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This includes tax exemptions (e.g. income from child benefits that is not included in the tax base); child tax allowances (amounts for children that are deducted from gross income and are not included in taxable income), and child tax credits (amounts that are deducted from the tax liability).

2) Total family benefits estimated based on a family with "Two-parent, two-earner", as a % of average full-time earnings. Family cash benefits are defined here as family-related transfers to families, often taking the form of child benefits, family allowances or family-related refundable/non-wastable tax credits.

(2017-2019년)과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2017-2019년)이 포함된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이란,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 혹은 보조금, 부모에게 배정된 공공보육지원금, 청년 및 주거 지원금, 가족서비스 지원을 포함하는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의미한다[3].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은 아동 1인당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USD PPP)을 의미한다[4].

마지막으로 휴가정책에는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2017년), 어머니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소득대체율(2020년)과 어머니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소득전액보존 기간(2020년),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소득대체율(2020년)과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소득전액보존 기간(2020년)이 포함된다.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란, 출생 당(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USD PPP)을 의미한다[5].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득대체율은 가족 관련 휴가 및 휴직(유급 출산휴가,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가족휴가, 유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평균 소득대체 비율(%)을 의미한다[6].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득 전액보존 기간은 가족 관련

---

3) Public spending on servic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which includes the direct financing or subsidisation of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ilities, public childcare support through earmarked payments to parents, public spending on assistance for young people and residential facilities, and public spending on family services, including centre-based facilities and home help services for families in need.

4) Public expenditur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 in USD PPP(purchasing power parity), with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onverted into USD PPP and presented per child aged 0-5. Data on public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formal day-care services per child aged 0-2 and public expenditure on pre-primary education per child aged 3-5 are also shown.

5)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per live birth (per child born)

6) The payment rates shown are the average payment rate available across the

휴가 및 휴직 (유급 출산휴가,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가족휴가, 유급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소득의 100%와 등가인 기간(weeks)을 의미한다[7]. 즉,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가 및 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대체율을 곱하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소득의 100%와 등가를 이루는지 계산할 수 있다.

2. 아동 삶의 질

결과조건에 해당하는 아동 삶의 질로 본 연구에는 아동의 건강, 경제, 시간의 측면에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OECD Family Database와 OECD Child Well-being Data에서 선택한 변수와 변수 별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에 있어 아동 삶의 질을 드러내는 지표로 저체중아 출생비율(2018-2019년)과 영아사망률(2018-2019년)이 포함되었다. 저체중아 출생비율이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저체중아 기준(2.5kg)에 미달을 이루는 출생아의 비율(%)을 의미한다[8]. 영아사망률은 1000명의 출생아 당 만 1세 미만 영아의 사망 비율(%)을 뜻한다[9]. 둘

---

relevant paid leave for an individual on 100% of national average earnings.

7) Because payment rates vary across countries and types of leave, entitlements are presented in both ‘duration in weeks’ form and in ‘full-rate equivalent’ (FRE) form, that is, as the length of the paid leave in weeks if it were paid at 100% of previous earnings. The calculation of the full-rate equivalent (FRE) can be summarised as

*FRE = Duration of leave in weeks * payment rate (as percent of average earnings) received by the claimant over the duration of the leave*

8) Follow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finition, an infant is considered to have a low birth weight if their weight at birth is less than 2500 grams (5.5 pounds). This threshold is based on epidemiological observations regarding the increased risk of death to the infant and serves as a benchmark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The proportion of low birth weight infants is the number of live births weighing less than 2500 grams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live births.

9) The infant mortality rate, defined as the number of deaths of children aged

째로 아동의 경제적 삶의 질을 드러내는 지표로 아동가구빈곤율(2018년)이 사용되었다. 아동가구빈곤율은 0-17세 아동이 포함된 가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10]. 셋째, 아동의 시간에는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량,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이 포함된다. OECD Child Well-being Data에서 조사된 어머니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은 어머니, 아버지 각자가 자녀에 대한 신체적 돌봄, 보호 및 관찰, 가르치기, 읽기, 놀이에 소요하는 시간(minute per day)을 의미한다[11]. 한국의 시간량을 추가하기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자료에서도 같은 행동분류를 포함한 시간량이 계산되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과 여성 각각을 선택하였으며,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와 10세 이상 초중고생에 대해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공부봐주기, 간호하기 시간량이 계산되었다.

분석에 앞서, 아동 삶의 질에 해당하는 하위 조건들의 해석의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 저체중아 출생비율, 영아사망률, 아동가구빈곤율에 대해서는 퍼지점수를 역코딩하였다. 다시 말해, 아동 삶의 질의 각각의 하위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저체중아 출생비율, 낮은 영아사망률, 낮은 아동가구빈곤율, 어머니와 보내는 높은 시간량, 아버지와 보내는 높은 시간량으로 해석한다.

이상의 주요변수는 <표 3-1>로 정리된다.

---

less than one in a given year per 1000 live births.

10) The 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defined as the percentage of children (0-17 year-olds) with an equivalised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e. an income after taxes and transfers adjusted for household size) below the poverty threshold. The poverty threshold is set here at 50% of the median disposable income in each country.

11) Amount of time spent on physical care and child supervision and time spent teaching, reading, and playing with children, parents, 15-64 year-olds, in minutes per day. Data refer to the amount of time spent on childcare that respondents report themselves in their time-use diaries as a primary activity (i.e. without doing other activities at the same time).

<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변수의 정의	자료
현금 정책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	아동이 있는 가구의 현금지원(아동수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지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 세금 감면 혜택(아동가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을 포함하는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	OECD Family Database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	맞벌이 가족에 대한 공적이전금액(移轉)으로, 아동수당, 가족수당, 가족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수당의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비중(%)	
서비스 정책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 혹은 보조금, 부모에게 배정된 공공보육지원금, 청년 및 주거 지원금, 가족서비스 지원을 포함하는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USD PPP)	
휴가 정책	아동 1인당 출산휴가/육아휴직 공공지출 금액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USD PPP)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가족 관련 휴가 및 휴직(유급 출산휴가,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가족휴가, 유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평균 소득대체 비율(%)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어머니 소득 전액보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가족 관련 휴가 및 휴직(유급 출산휴가,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가족휴가, 유급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소득의 100%와 등가인 기간(weeks)	
	아버지 소득 전액보존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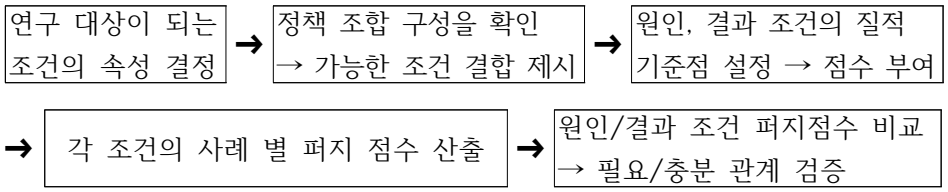
아동 건강	저체중아 출생비율	WHO의 저체중아 기준(2.5kg)에 미달을 이루는 출생아의 비율(%)	OECD Child Well-being Data,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영아사망률	1000명의 출생아 당 만 1세 미만 영아의 사망 비율(%)	
아동 경제	아동가구빈곤율	0-17세 아동이 포함된 가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가구의 비율(%)	
아동 시간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량	[한국 이외 모든 국가] 자녀에 대한 신체적 돌봄, 보호 및 관찰, 가르치기, 읽기, 놀이에 소요하는 시간(minute per day) [한국]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와 10세 이상 초중고생에 대해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공부 봐주기, 간호하기 시간량(minute per day)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		

제 3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다양한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다른 정책과 결합해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지 검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방법론(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이하 fsQCA)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연구 절차는 <그림 3-1>과 같다. 우선 연구 대상이 되는 조건의 속성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9가지의 가족정책'을 원인 조건,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을 결과 조건으로 하며, 원인 조건에 해당하는 정책과 결과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 삶의 질에 하위 요인은 <표 3-1>의 주요변수로 결정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원인 조건이 되는 가족정책에 대해 정책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능한 조건들의 결합(configurative)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 결과조건과 원인조건 사이에 각 사례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며, 각 항목에 대한 질적 기준점(break point)을 설정한다. 질적 기준점이란 완전히 소속됨의 기준, 완전히 소속되지 않음의 기준, 중간 분기점의 기준으로, 등간척도에서의 변수에 상응하는 값이다. 이러한 질적 기준점은 원자료에서의 비율 및 등간 척도의 값을 조건 간 비교 가능한 퍼지점수로 변환하는 데에 사용된다(이승윤, 2014). 다음으로, 각 조건 및 조건 결합에 대해 사례의 퍼지 점수를 산출한다. 퍼지점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각 조합에 해당하는 입력 값(독립변수에 상응하는 값)과 결과 값(종속변수에 상응하는 값)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값들은 진리표라는 데이터 행렬로 재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원인 조건과 결과 조건 사이에 산출된 퍼지점수를 비교함으로써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관계를 검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석 절차를 마친 뒤에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사례중심적' 접근을 위해 각 사례로 돌아와 해당 연구 결과가 도출된 것을 각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해석하게 된다.

<그림 3-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fsQCA를 주요 분석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fsQCA는 국제비교 연구에 있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장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크게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그리고 역사적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안상훈, 2002).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적 분석에서는 개별 사례보다 변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며, 질적 분석에서는 개별 사례에 관심이 있다. 반면, fsQCA는 사례중심의 질적 분석과 변수중심의 양적 분석을 결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agin, 2000). 즉, 회귀분석과 같은 계량적 방법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며, 소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 및 역사적 접근은 개별 사례의 특수성에 관심을 둔다. 반면, fsQCA는 한정된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검증하고 다시 개별 사례로 돌아와 각국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해 사례에 따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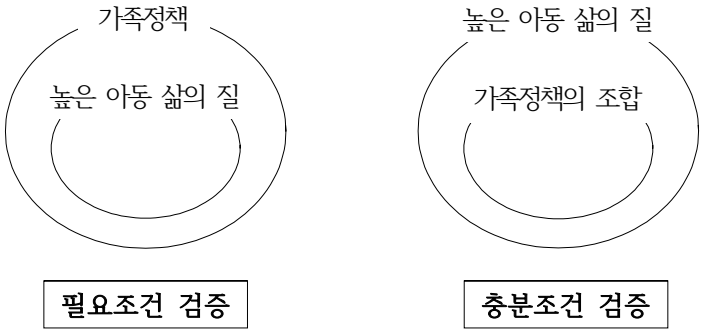
둘째, fsQCA의 방법론을 통해 원인조건의 결합인과관계(conjunctual causation)를 밝힐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별 가족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여러 정책이 어떤 양상으로 결합해 국가마다 다른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있다. 즉 원인조건들이 어떤 결합으로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존의 양적 연구는 원인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만을 밝힐 수 있으며, 변수 간 서로 다른 결합관계에 의해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포착하지 못한다(김지현, 2020). 회귀분석

에서는 상호작용항을 통해 일정 정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만, 국가 간 비교라는 적은 사례 수로는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민기채, 2014). 따라서 퍼지셋 분석을 통해 각각의 사례의 특성 간에 상호작용의 효과를 완전히 허용하는 결합적 인과성 구조(joint causal system)를 가짐으로써 국제비교로 높은 아동 삶의 질을 위한 가족정책의 발전방향에 '다양한 정책 경로'를 반영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말해, fsQCA은 유사하게 설계된 정책이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관련 정책이 갖는 상호작용에 따라 각 나라에서 다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Gligor & Bozkurt, 2020). 또한 fsQCA과 회귀분석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 간 비교와 같이 적은 수의 사례에 대해서도 변수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으며, 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원인이 되는 정책변수가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설명이 가능하다.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는 집합관계를 통해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검증하며, 집합관계에서는 일관성(consistency)과 설명력(coverage) 계수를 사용하여 현상을 설명한다(Ragin, 2008). 필요조건이란, 결과집합 Y가 원인집합 X의 하위집합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필요조건은 결과가 존재하면 원인이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충분조건이란, 원인집합 X가 결과집합 Y의 하위집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충분조건은 원인이 존재하면 항상 결과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러한 집합관계를 활용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방법에서는 필요조건 검증을 통해 높은 아동 삶의 질이라는 결과를 만족하기 위해 우선 만족해야하는 가족정책(필요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분조건 검증을 통해서는 어떠한 가족정책의 조합(충분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높은 아동 삶의 질을 만족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그림 3-2> 높은 아동 삶의 질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일관성은 원인집합이 결과집합의 부분집합인 정도를 설명하며, 일관성이 높을수록 원인집합과 결과집합 사이의 관계가 가까움을 의미한다. 일관성 값의 기준이 되는 수준기표(benchmark)의 해석은 <표 3-2>와 같다. 대체로 일관성 값이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거의 항상 충분/필요'(일관성 값이 0.80 이상)이거나, '대체로 충분/필요'(일관성 값이 0.65 이상)인 경우 원인집합은 결과집합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된다고 본다. 한편 설명력은 회귀분석에서의 결정계수 값(R square)과 유사한 개념으로, 원인집합이 결과집합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설명력은 또 다시 개별설명력과 구분설명력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개별설명력(raw coverage)은 각 결합요인이 가진 설명력을, 구분설명력(unique coverage)은 다른 결합요인과 겹치지 않는 해당 결합요인만의 순수한 설명력을 의미한다.

<표 3-2> 수준기표에 따른 필요조건, 충분조건의 해석

수준기표	결과 해석
0.8	거의 항상 (almost always) 필요 또는 충분
0.65	대체로 (usually) 필요 또는 충분
0.50	가끔 (necessary more often than not) 필요 또는 충분

출처: Ragin et al(2006), 김병섭(2010), 황인영(2021) 재인용

아동 삶의 질에 대한 충분조건의 경우, 원인집합과 결과집합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진리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진리표는 모든 원인조건 변수의 결합을 나타내는 2^k개의 행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k는 원인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9개의 가족정책 원인조건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가능한 원인의 결합조건은 514개($\because 2^9 = 514$)이다. 이 결합조건 가운데 일관성이 적어도 0.8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이승윤, 2014)에 따라 일관성 점수가 0.8 이상인 경우만 충분조건으로 상정하였으며, 0.8 미만인 조합은 제거되어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일관성 기준을 만족한 조합 중 유의하게 도출된 충분조건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각 충분조건 결과에 최적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적사례가 0인 것의 의미는 해당 조합에 대한 모든 국가의 소속점수가 0.5 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충분조건으로 도출되는 가족정책의 조합에 해당하는 국가가 현재 없을지라도 모든 사례는 부분적으로 각 배열에 포함될 수 있으며(Ragin, 2000), 현존하는 최적사례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론적으로는 과거 혹은 미래 사회에 해당 조합을 가진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적사례가 0인 충분조건의 원인조합들 또한 해석에 포함한다.

본 연구는 '아동 삶의 질'을 결과요인으로 하고, 아동 삶의 질을 건강, 경제, 시간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아동의 건강에는 저체중아 출생비율(WEIGHT), 영아사망률(MORTALITY), 아동의 경제에는 아동가구빈곤율(POVERTY), 그리고 아동의 시간에는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량(MOMTIME)과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DADTIME)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가족정책은 현금정책, 서비스정책, 휴가정책의 측면에서 아홉 가지 정책 원인 조건을 포함하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현금정책에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CASH),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BENEFIT), 서비스정책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SERVICE)과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CHILDCARE), 마지막으로 휴가정책에는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공지출 금액(LEAVE),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MOMPAYMENT)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DADPAYMENT), 어머니 소득 전액보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MOMLENGTH), 아버지 소득 전액보존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DADLENGTH)이 포함된다. 이상의 조건을 토대로 한 분석모델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분석 모델

WEIGHT, MORTALITY, POVERTY, MOMTIME, DADTIME = CASH + BENEFIT + SERVICE + CHILDCARE + LEAVE + MOMPAYMENT + DADPAYMENT + MOMLENGTH + DADLENGTH

분석모델은 모두 대문자로 표현하였고, 이후 표현되는 소문자는 해당 집합의 여집합이다. 대문자로 표현된 각 요인은 높은 아동 삶의 질,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의미하며, 소문자로 표현된 각 요인은 낮은 아동 삶의 질, 소극적인 가족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분석에는 STATA SE 17이 활용되었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진리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에 대한 개별 사례의 값의 원점수를 퍼지점수로 변환해야한다. 퍼지점수는 해당 조건에 대한 소속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Ragin(2008)에 따르면 <표 4-1>과 같이 언어적 표현으로 제시된 소속의 정도를 수리적인 표현으로 변환할 수 있다. 퍼지점수는 각 지표의 최댓값, 최솟값, 중위값 3가지를 고정축(anchor)으로 하여 계산한다. 본 연구의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원점수 및 퍼지점수는 <표 4-2> ~ <표 4-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리표(truth-table)는 분석모델을 설정한 뒤, 모델에 해당하는 조건을 퍼지점수로 변환한 후, 변수의 논리적인 배열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된다(Schneider & Wagemann, 2010). 본 연구의 진리표는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1은 원인 및 결과조건이 분기점(0.5) 이상으로 큰 값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0은 분기점 미만으로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 4-6>에서 한국은 현금정책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cash),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benefit)이 모두 낮으며, 서비스정책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SERVICE),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CHILDCARE)은 모두 높다. 휴가정책에 해당하는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은 낮으며(leave),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MOMPAYMENT), 소득 전액보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MOMLENGTH)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버지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낮지만(dadpayment), 아버지의 소득 전액보존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긴 국가에 해당한다(DADLENGTH).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한국의 사례와 같이 현금정책에 해당하는 두 원인조건이 모두 같은 방향성을 갖는 경우 '현금지원이 소극적이다(높은 경우, 적극적이다)'로 표현하며, 서비스정책에 해당하는 두 원인조건이 같은 방향성을 갖는 경우 '서비스지원이 적극적이다(낮은 경우, 소극적이다)'로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휴가정책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의 가족정책 지표 가운데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높은 경우, '휴가지원이 적극적이다(낮은 경우, 소극적이다)'로 표현하며,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있어 소득대체율과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모두 긴 경우, '어머니에 대한 휴가지원이 적극적이다(낮은 경우, 소극적이다)'로 표현한다. 아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과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모두 긴 경우,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이 적극적이다(낮은 경우, 소극적이다)'로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공지출 금액이 높아 '휴가지원이 적극적'임에도, '어머니에 대한 휴가지원은 소극적'인 결과 또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2>와 <표 4-4>에서는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원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표에 대한 OECD 20개국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원인조건 중 첫 번째 현금지원 정책이다.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GDP 대비 평균 1.26%이며, 우리나라는 0.15%로 OECD 국가 중 현금지원 공공지출이 두 번째로 낮았다.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은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평균 5.27%의 수준이었으며, 폴란드가 11.05%, 오스트리아가 10.46%로 높은 편에 속하며, 우리나라, 스페인, 미국은 0%로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해당한다. 둘째, 서비스지원 정책이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GDP 대비 평균 1.06%이며, 우리나라는 0.95%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속한다. 또한 아동 1인당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금액은 평균 5,806달러이다. 노르웨이(12,300달러), 스웨덴(11,700달러), 덴마크(11,100달러)가 높은 수준, 미국(2,600달러), 폴란드(2,300달러), 슬로베니아(2,500달러)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6,900달러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은 USD PPP기준 평균 15,579.24달러이다. 우리나라는 3011.51달러로 OECD 평균에 비해 공공지출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휴가지원 정책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머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73.6%,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버지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평균 56.53%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전반에서 소득대체율 지원수준이 어머니에게서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호주,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라투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득대체율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벨기에와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그리고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은 어머니가 평균 12.63주, 아버지가 평균 1.73주로 소득 전액보존 기간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긴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머니의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평균 10.81주, 아버지는 평균 2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구 대상 국가에서 어머니의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아버지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 삶의 질 지표이다. 저체중아 출생비율은 OECD 평균 6.23%이며 표준편차는 1.46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아의 출생비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9.4%), 미국(8.3%)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6.20%로 평균 부근이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세미만 사망비율로 OECD 평균 3.14%이며 우리나라는 2.8%로 평균에 비해 영아사망률이 낮은 편이다. 아동가구빈곤율은 0-17세 아동 포함 가구의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가구의 비율로, OECD 평균 11.07%이다. 미국(21.2%), 스페인(19.3%)의 순서로 아동가구빈곤율이 높았으며, 핀란드(3.5%), 덴마크(4.7%)의 순서로 아동가구빈곤율이 낮았다. 우리나라는 12.3%로 아동가구빈곤율이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량은 OECD 평균 어머니 96.72분, 아버지 42.24분이다. 우리나라는 어머니가 106.90분, 아

버지가 29분으로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많으나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언어의 수리적 표현

언어적 표기	소속 정도	소속 공간	소속 로그오즈
완전소속 (full membership)	0.993	148.41	5
완전 소속의 한계점 (threshold of full membership)	0.953	20.09	3
거의 소속 (mostly in)	0.881	7.39	2
비소속보다 소속 (more in than out)	0.622	1.65	0.5
분기점 (cross over point)	0.5	1	0
소속보다 비소속 (more out than in)	0.378	0.61	-0.5
거의 비소속 (mostly out)	0.119	0.14	-2
완전 비소속의 한계점 (threshold of full non-membership)	0.047	0.05	-3
완전 비소속 (full non-membership)	0.007	0.01	-5

<표 4-2> 퍼지셋 분석을 위한 원인조건의 원점수

원인조건 / 국가	CASH	BENEFIT	SERVICE	CHILDCARE	LEAVE	MOMPAYMENT	DADPAYMENT	MOMLENGTH	DADLENGTH
Australia	1.40	2.62	0.70	4,200	4,819.66	42.40	42.40	7.63	0.85
Austria	1.88	10.46	0.70	4,900	7,383.26	100.00	17.91	16.00	0.78
Belgium	1.71	8.57	1.02	6,100	10,694.50	65.56	75.06	9.83	1.50
Denmark	1.32	5.30	2.08	11,100	23,756.30	52.40	52.40	9.43	1.05
Estonia	2.02	8.39	0.81	4,000	39,195.20	100.00	100.00	20.00	2.00
Finland	1.23	5.46	1.64	8,000	28,945.30	74.80	63.04	13.09	1.89
France	1.42	3.97	1.46	8,400	8,318.60	95.68	95.68	15.31	1.91
Germany	1.08	9.22	1.25	6,600	12,376.90	100.00	0.00	14.00	0.00
Ireland	1.20	7.15	0.36	3,200	5,378.65	27.29	27.29	7.10	0.55
Italy	1.35	2.98	0.63	4,600	11,060.10	80.00	100.00	17.36	1.40
Japan	0.65	4.57	0.93	5,900	7,268.13	67.00	0.00	9.38	0.00
Korea	0.15	0.00	0.95	6,900	3,011.51	84.05	100.00	10.81	2.00
Latvia	1.35	3.45	0.87	3,400	16,794.80	80.00	80.00	12.80	1.14
Norway	1.27	3.89	1.97	12,300	37,935.60	95.50	0.00	17.19	0.00
Poland	2.00	11.05	0.61	2,300	35,946.30	100.00	100.00	20.00	2.00
Slovenia	1.18	7.65	0.66	2,500	20,443.50	100.00	100.00	15.00	4.29
Spain	0.51	0.00	0.68	3,800	1,798.52	100.00	100.00	16.00	12.00
Sweden	1.24	6.01	2.15	11,700	30,697.40	77.47	58.10	9.96	0.83
United Kingdom	2.12	4.56	1.12	3,600	5,760.66	29.76	18.81	11.61	0.38
United States	0.07	0.00	0.56	2,600	0.00	0.00	0.00	0.00	0.00
평균	1.26	5.27	1.06	5805	15,579.24	73.60	56.53	12.63	1.73
표준편차	0.57	3.32	0.53	3090.64	12,818.26	29.35	40.12	4.84	2.63
단위	%	%	%	USD PPP	USD PPP	%	%	주(week)	주(week)

<표 4-3> 퍼지셋 분석을 위한 원인조건의 퍼지점수

원인조건 / 국가	CASH	BENEFIT	SERVICE	CHILDCARE	LEAVE	MOMPAYMENT	MOMLENGTH	DADPAYMENT	DADLENGTH
Australia	0.59	0.20	0.25	0.34	0.16	0.20	0.23	0.29	0.34
Austria	0.89	0.94	0.25	0.51	0.28	0.95	0.79	0.11	0.29
Belgium	0.82	0.86	0.57	0.63	0.49	0.37	0.33	0.75	0.53
Denmark	0.52	0.54	0.94	0.93	0.80	0.26	0.31	0.40	0.47
Estonia	0.93	0.85	0.37	0.29	0.95	0.95	0.95	0.95	0.56
Finland	0.46	0.56	0.85	0.78	0.87	0.45	0.52	0.55	0.55
France	0.61	0.36	0.79	0.81	0.33	0.91	0.73	0.94	0.56
Germany	0.37	0.89	0.70	0.68	0.54	0.95	0.61	0.05	0.05
Ireland	0.44	0.75	0.05	0.13	0.18	0.12	0.20	0.16	0.18
Italy	0.55	0.23	0.18	0.45	0.50	0.50	0.87	0.95	0.52
Japan	0.17	0.45	0.52	0.61	0.27	0.38	0.30	0.05	0.05
Korea	0.06	0.05	0.53	0.70	0.10	0.65	0.38	0.95	0.56
Latvia	0.55	0.29	0.45	0.16	0.65	0.50	0.49	0.81	0.50
Norway	0.49	0.35	0.93	0.95	0.95	0.91	0.86	0.05	0.05
Poland	0.93	0.95	0.17	0.05	0.93	0.95	0.95	0.95	0.56
Slovenia	0.43	0.79	0.21	0.06	0.73	0.95	0.71	0.95	0.71
Spain	0.13	0.05	0.23	0.24	0.08	0.95	0.79	0.95	0.95
Sweden	0.47	0.63	0.95	0.94	0.89	0.48	0.33	0.47	0.33
United Kingdom	0.95	0.44	0.63	0.20	0.20	0.13	0.42	0.11	0.12
United States	0.05	0.05	0.13	0.07	0.05	0.05	0.05	0.05	0.05

<표 4-4> 퍼지셋 분석을 위한 결과조건의 원점수

결과조건 / 국가	WEIGHT	MORTALITY	POVERTY	MOMTIME	DADTIME
Australia	6.50	3.30	13.30	184.40	71.90
Austria	6.40	2.90	9.60	160.00	72.00
Belgium	6.70	3.60	9.20	75.00	31.00
Denmark	4.90	3.80	4.70	103.00	55.00
Estonia	4.20	2.30	10.30	87.00	25.00
Finland	4.20	2.00	3.50	108.00	54.00
France	7.60	3.90	11.70	66.00	32.00
Germany	6.60	3.30	11.10	85.00	35.00
Ireland	5.70	3.00	8.00	82.00	26.00
Italy	7.40	2.70	18.00	111.00	58.00
Japan	9.40	1.90	14.00	90.00	18.90
Korea	6.20	2.80	12.30	106.90	29.00
Latvia	4.40	4.10	10.20	57.00	14.00
Norway	4.60	2.30	8.10	86.00	51.00
Poland	5.70	4.00	7.40	101.00	42.00
Slovenia	6.60	2.10	5.90	78.00	30.00
Spain	7.80	2.70	19.30	86.00	54.00
Sweden	4.50	2.40	9.40	87.00	55.00
United Kingdom	6.90	3.90	14.10	95.00	42.00
United States	8.30	5.80	21.20	86.00	49.00
평균	6.23	3.14	11.07	96.72	42.24
표준편차	1.46	0.95	4.64	29.44	16.62
단위	%	%	%	분(minute)	분(minute)

<표 4-5> 퍼지셋 분석을 위한 결과조건의 퍼지점수

결과조건 / 국가	WEIGHT	MORTALITY	POVERTY	MOMTIME	DADTIME
Australia	0.49	0.41	0.30	0.95	0.95
Austria	0.52	0.54	0.57	0.90	0.95
Belgium	0.44	0.34	0.61	0.23	0.24
Denmark	0.89	0.29	0.92	0.62	0.79
Estonia	0.95	0.86	0.50	0.50	0.14
Finland	0.95	0.94	0.95	0.66	0.77
France	0.24	0.27	0.40	0.11	0.26
Germany	0.46	0.41	0.44	0.45	0.32
Ireland	0.73	0.49	0.73	0.38	0.15
Italy	0.28	0.67	0.11	0.68	0.83
Japan	0.05	0.95	0.26	0.52	0.08
Korea	0.58	0.61	0.36	0.65	0.20
Latvia	0.94	0.23	0.51	0.05	0.05
Norway	0.92	0.86	0.72	0.48	0.71
Poland	0.73	0.25	0.78	0.61	0.50
Slovenia	0.46	0.92	0.87	0.29	0.22
Spain	0.20	0.67	0.08	0.48	0.77
Sweden	0.93	0.83	0.59	0.50	0.79
United Kingdom	0.39	0.27	0.26	0.56	0.50
United States	0.13	0.05	0.05	0.48	0.67

<표 4-6> 퍼지셋 분석을 위한 최종 진리표

원인·결과조건 / 국가	약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Australia	AUS	1	0	0	0	0	0	0	0	0	0	0	0	1	1
Austria	AST	1	1	0	1	0	1	1	0	0	1	1	1	1	1
Belgium	BEL	1	1	1	1	0	0	0	1	1	0	0	1	0	0
Denmark	DEN	1	1	1	1	1	0	0	0	0	1	0	1	1	1
Estonia	EST	1	1	0	0	1	1	1	1	1	1	1	1	1	0
Finland	FIN	0	1	1	1	1	0	1	1	1	1	1	1	1	1
France	FRN	1	0	1	1	0	1	1	1	1	0	0	0	0	0
Germany	GER	0	1	1	1	1	1	1	0	0	0	0	0	0	0
Ireland	IRE	0	1	0	0	0	0	0	0	0	1	0	1	0	0
Italy	ITA	1	0	0	0	1	1	1	1	1	0	1	0	1	1
Japan	JPN	0	0	1	1	0	0	0	0	0	0	1	0	1	0
Korea	KOR	0	0	1	1	0	1	0	1	1	1	1	0	1	0
Latvia	LAT	1	0	0	0	1	1	0	1	1	1	0	1	0	0
Norway	NOR	0	0	1	1	1	1	1	0	0	1	1	1	0	1
Poland	POL	1	1	0	0	1	1	1	1	1	1	0	1	1	1
Slovenia	SLO	0	1	0	0	1	1	1	1	1	0	1	1	0	0
Spain	SPN	0	0	0	0	0	1	1	1	1	0	1	0	0	1
Sweden	SWD	0	1	1	1	1	0	0	0	0	1	1	1	1	1
United Kingdom	UK	1	0	1	0	0	0	0	0	0	0	0	0	1	1
United States	USA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주) A = CASH, B = BENEFIT, C = SERVICE, D = CHILDCARE, E = LEAVE, F = MOMPAYMENT, G = DADPAYMENT, H = MOMLENGTH, I = DADLENGTH, J = WEIGHT, K = MORTALITY, L = POVERTY, M = MOMTIME, N = DADTIME

제 2 절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

1. 필요조건 검증

필요조건을 분석한 결과, 일관성의 수준기표가 0.8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유의한 필요조건은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준기표가 0.65(대체로 충분함)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높고(BENEFIT)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높은(LEAVE) 것은 유의수준 $p<0.1$ 하에서 낮은 아동가구빈곤율에 유의한 필요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즉, 아동가구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1)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높고 2)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높은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필요조건이 낮은 아동가구빈곤율을 설명하는 수준, 즉 설명력은 최소 79% 이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조건의 검증 결과는 원인조건(가족정책)과 결과(아동가구빈곤율) 사이에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필요조건이 유의하다는 것은 '원인 → 결과'라는 인과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결과를 갖는 공통적인 원인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4-7> 필요조건 분석 결과 (Y-일관성 검증, N-일관성 검증)

POVERTY에 대한 필요조건	검증기준						설명력
	Y 일관성 검증: Y 일관성 > 0.650, p<0.1			N 일관성 검증: Y 일관성 > N 일관성, p<0.1			
	Y 일관성	F	p	N 일관성	F	p	
BENEFIT	0.807	7.17	0.015	0.521	5.44	0.031	0.792
LEAVE	0.814	7.51	0.070	0.529	3.68	0.013	0.821

주) POVERTY: 아동가구빈곤율이 낮음
BENEFIT: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높음 LEAVE: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높음

2. 충분조건 검증

충분조건을 검증하는 이유는 높은 아동 삶의 질의 결과조건을 도출하는 데에 하나의 정책적 처방이 아닌, 국가의 가족정책에 대한 결합적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 가지 요인에만 집중한 정책적 처방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수 있다(Grant et al., 2004).

1) 저체중아 출생비율

아동 건강 지표인 낮은 저체중아 출생비율이라는 결과에 유의한 가족정책의 원인조합은 네 가지로 도출되었다(<표 4-8>). 첫째,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모두 높고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모두 적극적인 국가는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휴가 공공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모의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낮은 결과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인조합은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다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둘째로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지만,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고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모두 적극적인 경우이며, 셋째는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고, 현금지원이 소극적이지만, 서비스지원이 적극적이면서,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높고,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긴 경우에 저체중아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높은 소득대체율과 함께 국가의 적극적인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 지출이 모두 필요함을 의미

하며, 만약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으면서 국가의 현금지원도 소극적인 경우라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해 높은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며 아버지에게 긴 소득보존 기간, 그리고 적극적인 서비스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과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지만,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높고,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경우에도 저체중아의 출생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이 소극적인 경우에도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비중이 높고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모두 활발하다면 어머니에 대한 휴가지원과 상관없이 저체중아 출생비율을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1>은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높은 상위, 하위 3개 국가의 가족정책의 퍼지점수를 시각화한 것이다.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낮게 나타난 아동 삶의 질 상위 그룹의 국가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투비아, 하위 그룹의 국가는 스페인, 미국, 일본으로 나타났다. 상위 그룹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조건이 1에 더욱 가까운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하위 그룹에 비해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서비스지원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체중아 출생비율의 충분조건으로 중요한 현금지원이 적극적이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소득대체율이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현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모두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며, 저체중아 출생비율에 대한 충분조건 원인조합을 포함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우선 가족에 대한 서비스 공공지출을 늘리고 아동의 보육/유아교육에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 또한 늘린다면 저체중아 출생비율을 낮추는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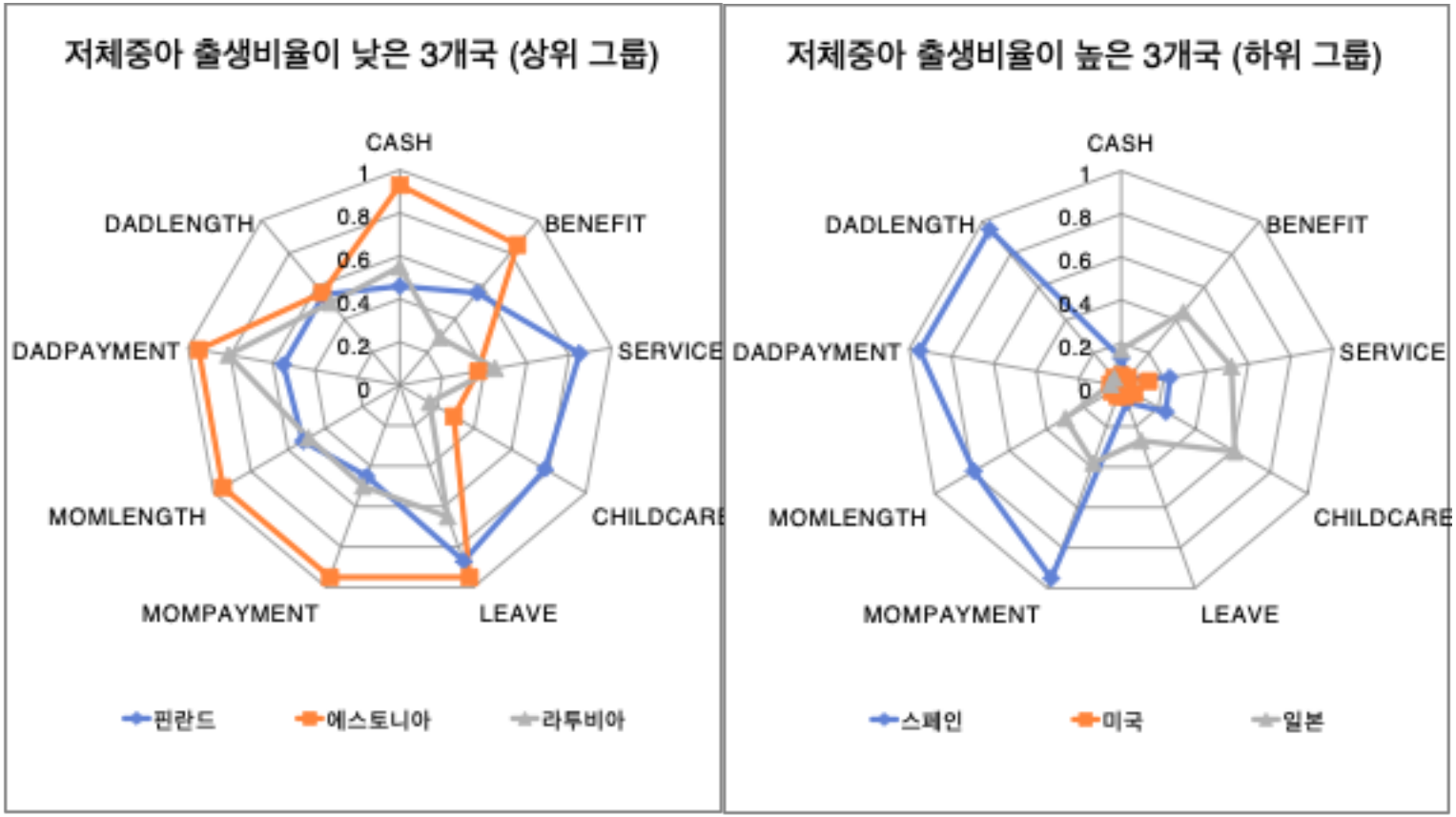
<표 4-8> 저체중아 출생비율에 대한 충분조건 원인조합의 축약결과

WEIGHT 충분조건 원인조합	개별설명력	구분설명력	일관성	최적사례
cash*benefit*SERVICE*CHILDCARE*MOMPAYMENT*momlength*DADPAYMENT*DADLENGTH	0.279	0.052	0.987	1(KOR)
CASH*BENEFIT*SERVICE*CHILDCARE*LEAVE*momlength*DADPAYMENT	0.283	0.007	0.976	0
CASH*SERVICE*CHILDCARE*LEAVE*dadpayment*dadlength	0.340	0.098	0.970	1(DEN)
SERVICE*CHILDCARE*LEAVE*MOMPAYMENT*DADPAYMENT	0.296	0.026	0.974	0
총 설명력(Total Coverage) = 0.466	결합식의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 = 0.951			

주) CASH: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높음
BENEFIT: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높음
SERVICE: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높음
CHILDCARE: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이 높음
LEAVE: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높음
MOMPAYMENT: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높음
MOMLENGTH: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길
DADPAYMENT: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높음
DADLENGTH: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길

cash: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낮음
benefit: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낮음
service: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낮음
childcare: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이 낮음
leave: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낮음
mompayment: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낮음
momlength: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짧음
dadpayment: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낮음
dadlength: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짧음

<그림 4-1> 저체중아 출생비율 국가별 충분조건 결합 형태



2) 영아사망률

아동 건강 지표에 해당하는 영아사망률에서는 한 가지 원인조합만이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표 4-9>).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낮고,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고,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모두 소득대체율이 낮지만, 어머니의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길고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활발할 때, 낮은 영아사망률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즉, 낮은 영아사망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보다는 적극적인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과 함께 어머니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 전액보전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2>은 영아사망률에 대한 상위, 하위 3개 국가의 가족정책의 퍼지 점수를 시각화한 것이다. 영아사망률이 낮게 나타나 아동 삶의 질이 높은 상위 그룹의 국가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일본, 하위 그룹의 국가는 폴란드, 미국, 라투비아로 나타났다. 영아사망률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경우, 결합효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9>의 충분조건 축약 결과와 같이, 낮은 영아사망률의 결과를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및 휴가 지원과 동시에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결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림 4-2>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폴란드, 미국, 라투비아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핀란드, 일본, 슬로베니아는 하위 그룹에 비해 오히려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은 국가가 있지만, 서비스 지원과 보다 안정적인 조합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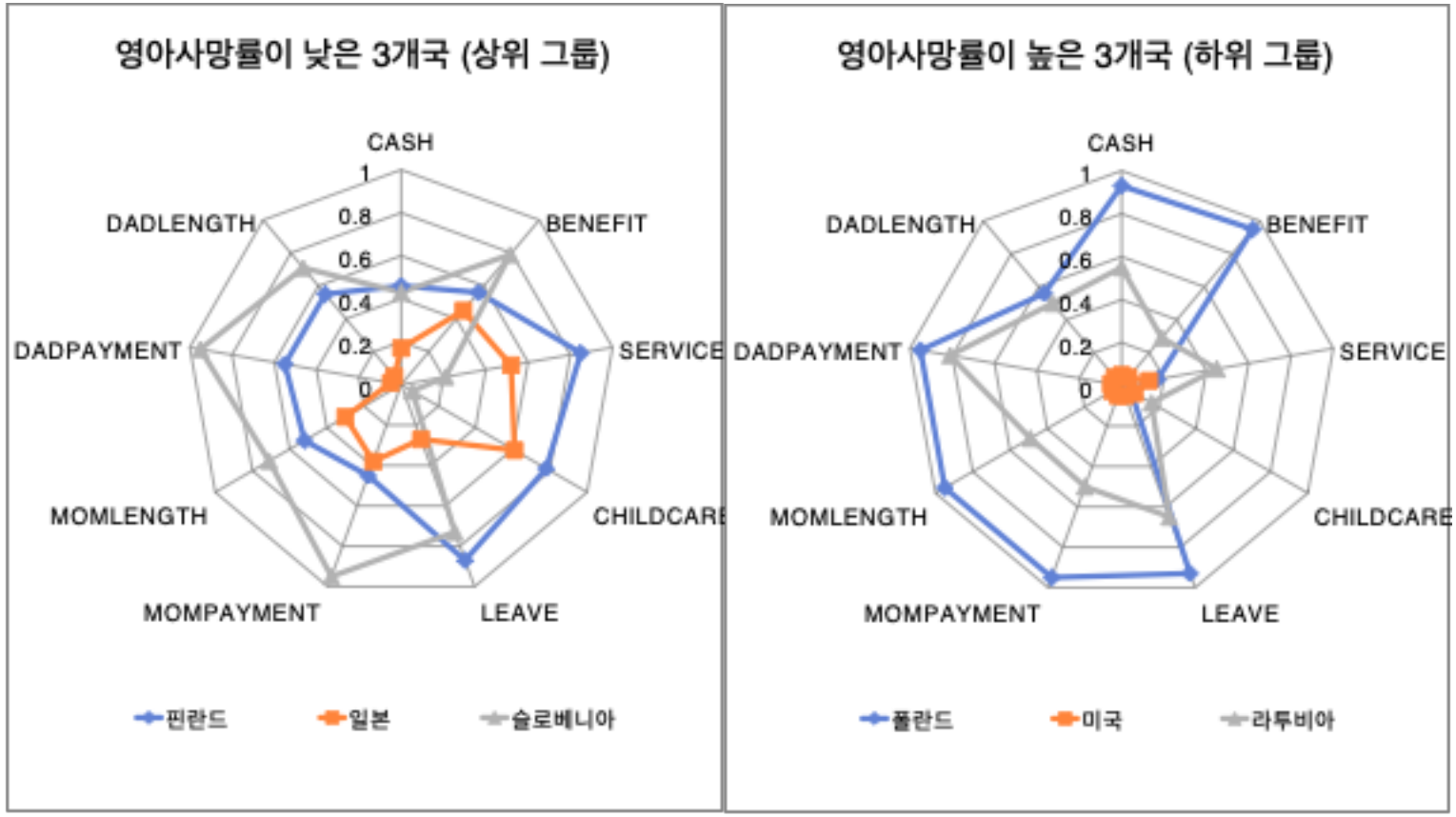
<표 4-9> 영아사망률에 대한 충분조건 원인조합의 축약결과

MORTALITY에 대한 충분조건	개별설명력	구분설명력	일관성	최적사례
cash*SERVICE*CHILDCARE*LEAVE*mompayment*MOMLENGTH*dadpayment*dadlength	0.234	0.234	0.992	0
총 설명력(Total Coverage) = 0.234		결합식의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 = 0.992		

주) CASH: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높음
BENEFIT: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높음
SERVICE: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높음
CHILDCARE: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이 높음
LEAVE: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높음
MOMPAYMENT: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높음
MOMLENGTH: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길
DADPAYMENT: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높음
DADLENGTH: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길

cash: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낮음
benefit: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낮음
service: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낮음
childcare: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이 낮음
leave: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낮음
mompayment: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낮음
momlength: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짧음
dadpayment: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낮음
dadlength: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짧음

<그림 4-2> 영아사망률 국가별 충분조건 결합 형태



3) 아동가구빈곤율

아동 경제 지표에 해당하는 아동가구빈곤율의 결과조건에서는 네 가지의 가족정책 원인조합이 도출되었다(<표 4-10>). 첫째는, 휴가지원이 소극적이며, 어머니가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낮은 소득대체율과 짧은 소득 전액보존 기간을 가짐에도, 아버지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에 높은 소득대체율과 긴 소득 전액보존 기간을 갖고,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이 적극적인 경우이다. 둘째로는 이와 반대로, 휴가지원과 서비스지원이 적극적이면서 어머니가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높은 소득대체율과 긴 소득 전액보존 기간을 가짐에도, 아버지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에 낮은 소득대체율과 짧은 소득 전액보존 기간을 갖고, 현금지원이 소극적인 경우에도 아동가구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두 원인조합 모두 서비스지원은 적극적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의 원인조합은 모두 반대로 나타났다. 즉, 아동가구빈곤율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경우 현금지원보다는 휴가지원에 높은 공공지출이 필요하며, 반대로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휴가지원보다는 현금지원에 높은 공공지출이라는 가족정책이 결합될 필요가 있었다. 셋째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모두 소극적인 경우에도, 적극적인 서비스 및 휴가지원 지출과 함께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아동가구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네 번째로, 아버지의 높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이외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모두 소극적인 경우에도, 적극적인 현금, 서비스, 휴가지원이 결합되었을 때 아동가구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낮은 아동가구빈곤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이 소극적인 경우에도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현금지원 혹은 아버지의 소득대체율을 통해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 지출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4-3>은 아동가구빈곤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하위 3개 국가의 가족정책의 퍼지점수를 시각화한 것이다. 상위 그룹의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하위 그룹의 국가는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로 나타났다. 아동가구빈곤율이 낮은 결과는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경우 현금지원보다는 적극적인 휴가지출과 결합되거나,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경우 휴가에 대한 공공지출보다는 현금지원에 대한 공공지출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충분조건 분석결과를 살펴본 바 있다. 실제로 폴란드의 경우,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이며 휴가에 대한 공공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합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아동가구빈곤율이 높은 하위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은 모두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출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페인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이 모두 활발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와 결합되어야 하는 현금지원이나 휴가지원에 대한 공공지출이 모두 낮아 낮은 아동가구빈곤율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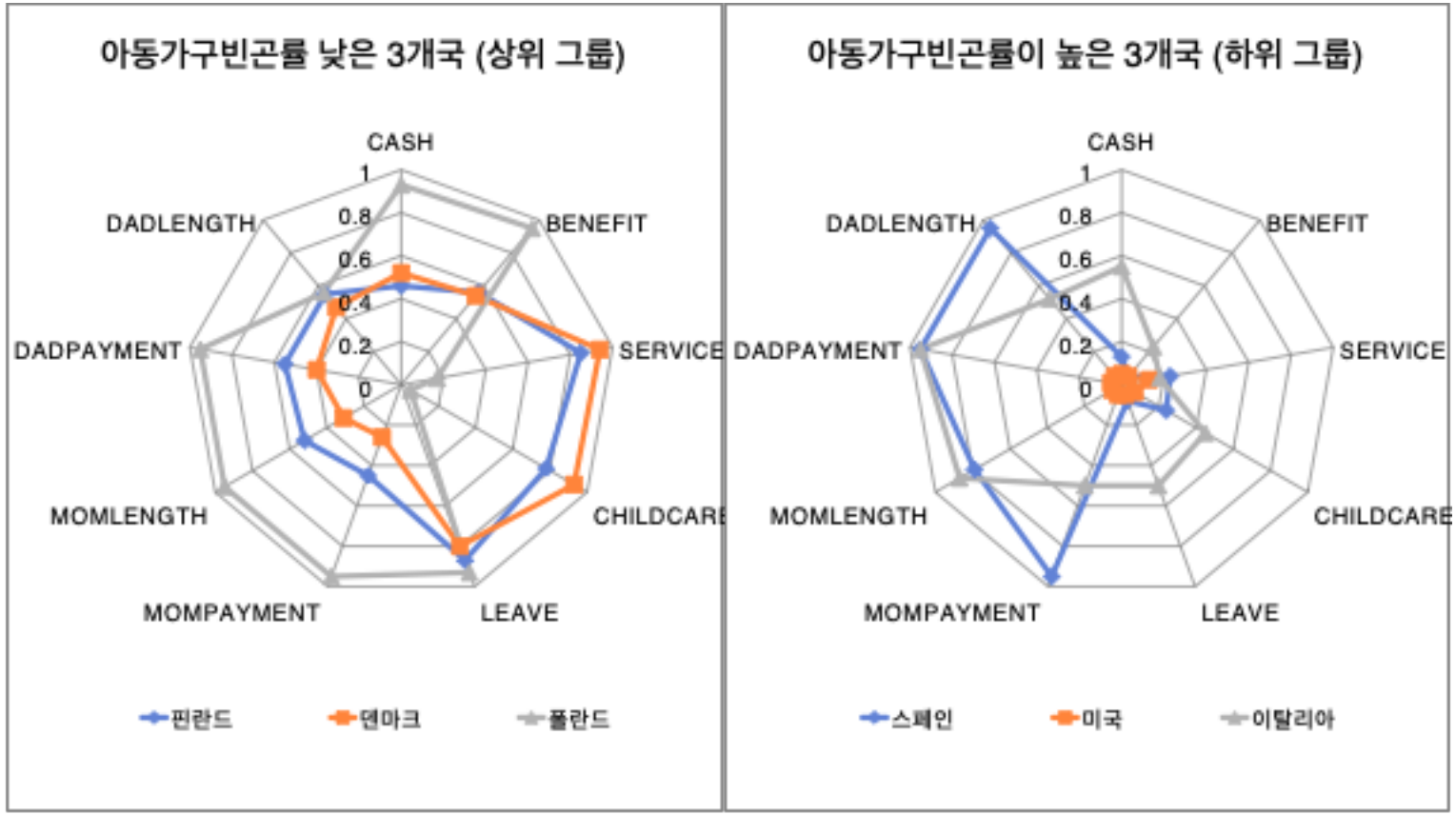
<표 4-10> 아동가구빈곤율에 대한 충분조건 원인조합의 축약결과

POVERTY 충분조건 원인조합	개별설명력	구분설명력	일관성	최적사례
cash*benefit*SERVICE*CHILDCARE*LEAVE*MOMPAYMENT*MOMLENGTH*dadpayment*dadlength	0.294	0.049	0.997	1(NOR)
cash*BENEFIT*SERVICE*CHILDCARE*LEAVE*mompayment*momlength*dadpayment*dadlength	0.291	0.013	0.997	1(SWD)
CASH*BENEFIT*SERVICE*CHILDCARE*leave*mompayment*momlength*DADPAYMENT*DADLENGTH	0.217	0.008	0.991	1(BEL)
CASH*BENEFIT*SERVICE*CHILDCARE*LEAVE*mompayment*momlength*DADPAYMENT*dadlength	0.297	0.000	0.993	0
총 설명력(Total Coverage) = 0.392		결합식의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 = 0.992		

주) CASH: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높음
BENEFIT: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높음
SERVICE: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높음
CHILDCARE: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이 높음
LEAVE: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높음
MOMPAYMENT: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높음
MOMLENGTH: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길
DADPAYMENT: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높음
DADLENGTH: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길

cash: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낮음
benefit: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낮음
service: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낮음
childcare: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이 낮음
leave: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낮음
mompayment: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낮음
momlength: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짧음
dadpayment: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낮음
dadlength: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짧음

<그림 4-3> 아동가구빈곤율 국가별 충분조건 결합 형태



4)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

마지막으로 아동의 시간 지표에서는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량에 가족정책의 유의한 원인조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설명하는 데에는 가족정책이 유의한 원인조합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에 대해서는 가족정책의 원인조합이 네 가지로 도출되었다(<표 4-11>). 첫째,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낮지만,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고, 어머니 아버지 모두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길며, 현금, 서비스, 휴가지원이 모두 적극적인 경우이다. 이 조합은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낮지만, 소득 전액보존 기간 긴 경우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버지의 평균적인 소득대체율은 낮지만 아버지에게 할당된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곱한 '소득 전액보존 기간' 자체는 길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할당 기간이 길면서 가족에 대한 현금, 서비스, 휴가지원이 모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조합은 결국 아버지가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량을 길게 하는 것이다. 이외의 둘째, 셋째, 넷째 조합에서는 모두 어머니가 낮은 소득대체율과 짧은 유급휴가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둘째와 셋째 조합은 공통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휴가지원이 소극적이지만,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이 높으며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모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둘째 조합은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낮았고, 셋째 조합은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로 나타났다. 네 번째 원인조합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휴가지원이 소극적이면서,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낮았지만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길며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 모두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휴가지원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휴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정책적 유인이 더

욱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과 아버지가 함께하는 높은 시간량의 결과에 대해 모든 가족정책의 원인조합에서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 공통적인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4-4>는 아버지와의 시간량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하위 3개 국가의 가족정책의 퍼지점수를 시각화한 것이다. 상위 그룹의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호주, 하위 그룹의 국가는 에스토니아, 일본, 라투비아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보내는 높은 시간량을 위해서는 높은 휴가지원 공공지출과 높은 서비스지원 공공지출이 결합되어야 하며,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길거나 아버지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상위 그룹에 속하는 국가 가운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나 소득대체율이 높은 조건에 속하는 사례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11>에서 아버지와 보내는 높은 시간량의 결과의 충분조건 원인조합에 해당하는 최적사례가 0으로,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가족정책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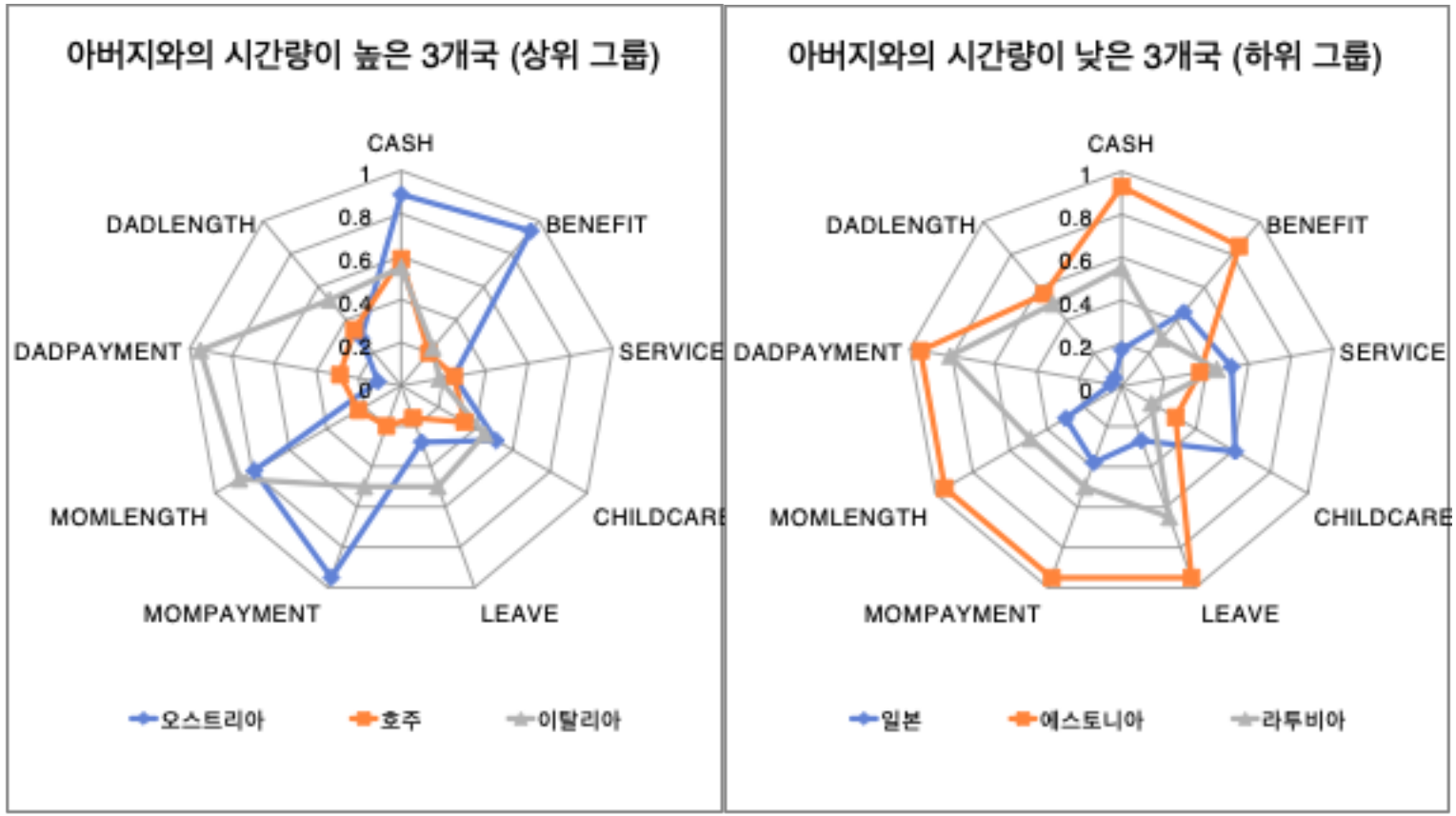
<표 4-11>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에 대한 충분조건 원인조합의 축약결과

DADTIME 충분조건 원인조합	개별설명력	구분설명력	일관성	최적사례
CASH*BENEFIT*SERVICE*CHILDCARE*LEAVE*MOMPAYMENT*MOMLENGTH*dadpayment*DADLENGTH	0.250	0.020	0.954	0
SERVICE*CHILDCARE*LEAVE*mompayment*momlength*dadpayment*DADLENGTH	0.251	0.007	0.954	0
cash*SERVICE*CHILDCARE*LEAVE*mompayment*momlength*DADPAYMENT	0.264	0.013	0.960	0
benefit*SERVICE*CHILDCARE*LEAVE*mompayment*momlength*DADPAYMENT	0.252	0.000	0.958	0
총 설명력(Total Coverage) = 0.304	결합식의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 = 0.962			

주) CASH: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높음
BENEFIT: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높음
SERVICE: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높음
CHILDCARE: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이 높음
LEAVE: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높음
MOMPAYMENT: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높음
MOMLENGTH: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길
DADPAYMENT: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높음
DADLENGTH: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길

cash: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낮음
benefit: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낮음
service: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낮음
childcare: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이 낮음
leave: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낮음
mompayment: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낮음
momlength: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짧음
dadpayment: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낮음
dadlength: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 짧음

<그림 4-4>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 국가별 충분조건 결합 형태



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가족정책과 아동의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아동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족정책의 결합 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OECD Family Database와 Child Well-Being Data, 그리고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2014년 시간량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방법을 사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은 무엇인가?'로, 필요조건 검증을 통해 높은 아동 삶의 질이라는 결과를 만족하기 위해 우선 만족해야하는 가족정책(필요조건)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가족정책이 어떻게 결합할 때 건강, 경제,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가?'로, 충분조건 검증을 통해서는 어떠한 가족정책의 조합(충분조건)이 만족될 때 높은 아동 삶의 질을 만족하기에 충분한지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정책에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공지출 금액,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어머니 소득 전액보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아버지 소득 전액보존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 결과요인인 아동 삶의 질에는 저체중아 출생비율, 낮은 영아사망률, 아동가구빈곤율, 어머니와 보내는 높은 시간량과 아버지와 보내는 높은 시간량을 포함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조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과 시간 측면 아동의 높은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가족정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가구빈곤율의 경우에는 유의한 필요조건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특정한 단일 가족정책만을 통해 아

동의 건강과 시간 측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낮은 아동가구빈곤율을 낮추는 가족정책은 총 두 가지가 도출되었다. 즉, 아동가구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높고,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높은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을 높이는 가족정책이나,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리는 가족정책이 아동가구빈곤율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빈곤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이전(移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세금 혜택,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Bradbury & Jantii 1999, 2001; Gornick & Jantti 2010; UNICEF 2005).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과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 변수를 모두 투입해 가족정책 가운데 현금지원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낮은 아동가구빈곤율의 유의한 필요조건으로 나타나, 부모 모두 근로를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현금지원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조되어야 경제적 측면에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이 높은 것 또한 아동가구빈곤율을 낮추는 가족정책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 돌봄을 위해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때 근로와 소득에 공백이 발생하는데, 국가가 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족의 소득 보존을 돕는다. 해당 연구 결과는 유급 휴가 및 휴직이 가족의 소득을 보완하여 아동의 빈곤을 예방한다는 Ferrarini(200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분조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중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량 이외에 아동의 건강(저체중아 출생비율, 영아사망률), 경제(아동가구빈곤율), 시간(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의 모든 아동 삶의 질 지표에서 유의한 가족정책의 원인조합이 도출되었다.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량에 유의한 가족정책의 조합이 도출되지 않은 결과는 가족정책이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와의 시간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을 높이는 가족정책의 원인조합이 실현될 때, 가족정책이 아동이 아버지와 보내는 높은 시간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어머니를 위한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OECD 국가의 가족정책은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에는 부족한 수준임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일과 가정에서 여러 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다중역할 수행함에 따라(우영지, 이기학, 2018),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가족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가족정책의 지원수준으로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며, 어머니의 다중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OECD 국가의 가족정책 지원수준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충분조건 검증 결과, 아동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가족정책 원인조합을 건강, 경제, 시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건강 측면의 아동 삶의 질에 대한 결과이다.** 저체중아 출생비율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결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휴가 공공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모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다는 공통점을 가진 원인조합은 두 가지로 도출되었는데, 이 경우 아버지에게 높은 소득대체율이 보장되며, 적극적인 현금, 서비스, 휴가 지원 공공지출이 전제될 때 낮은 저체중아 출생비율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이 소극적인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비중이 높고, 서비스와 휴가에 대한 공공지출이 활발할 때 어머니에 대한 휴가지원과 상관없이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영아사망률의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보다는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과 휴가지원, 그리고 어머니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 전액보존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의 특성과 생활 조건이 아동의 건강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며 (Hoffmann et al., 2022), 연구 결과 유의한 필요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반면 충분조건 검증 결과 아동의 건강 측면의 삶의 질과 가족정책이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동의 건강 측면 삶의 질은 단일한 가족정책의 원인조건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우며, 가족정책의 결합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논의와 일관성을 가진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와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공공보육지원과 부모의 유급 휴가 및 휴직 또한 아동의 건강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지원과의 관련성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공공보육지원을 비롯한 서비스지원의 경우 모든 원인조합에 포함된 공통요인으로 아동의 건강에 있어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휴가 및 휴직이 건강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다른 가족정책이 보장되었을 때 아동 건강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비중이 높고, 서비스와 휴가에 대한 공공지출이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휴가지원과는 관계없이 건강 측면의 아동의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 측면의 아동 삶의 질에 대한 결과이다. 아동가구빈곤율의 경우,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의 높은 공공지출이 결합되어야 하는 반면,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휴가지원에 대한 높은 공공지출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모두 소극적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족 대상 현금급여의 수준을 높이거나, 아버지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에 있어 공공지출을 늘리는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이나 세금 혜택과 같은 사회적 이전, 즉 현금지원 관련 가족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금 지원의 경우, 정부의 공공지출이 결합하는 상황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현금지원은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조건과 결합하였을 때 경제적 측면의 높은 아동의 삶의 질로 이어진다. 하지만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국가에서는 현금지원이 소극적이더라도 휴가지원에 대한 공공지출이 활발할 때 아동가구빈곤율이 낮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즉, 현금지원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머니의 휴가지원과 정부의 휴가지원에 대한 공공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아동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급 휴가 및 휴직이 아동의 빈곤과 높은 관련을 가진다는 선행연구(Ferrarini, 2006)에 반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모두 소극적으로 설계된 경우에도 필요조건으로 도출되었던 맞벌이 가구 현금급여 수준이 높고, 휴가지원에 공공지출이 활발한 경우에도 낮은 아동가구빈곤율 설명할 수 있었다.

셋째,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에 대한 결과이다. 연구 결과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에서만 유의한 충분조건 원인조합이 도출되었다. 유의한 네 가지 원인 조합 중 세 가지 조합은 모두 어머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가족을 위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적은 결과로,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아동과 시간을 보내는 양이 많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한 개의 원인조합에서는 어머니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현금, 서비스, 휴가에 대한 국가의 공공지출이 모두 활발하지만, 아버지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전액보존 기간의 정의가 '휴가 및 휴직에 할당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대체율'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에게 할당된

기간 자체가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할당된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길 때, 이것이 아동이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건강, 경제, 시간 관련 지표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정책의 원인조합에는 공통적으로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과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 즉 적극적인 서비스지원 정책이 모두 포함 되어 있었다. 즉, 다양한 원인조건 간 결합관계에서 국가가 특히 가족과 아동에 대한 활발한 서비스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높은 아동 삶의 질로 연결될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의 경우, 적극적인 서비스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 즉 적극적인 휴가지원이 공통적인 원인조합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높은 시간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서비스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휴가에 대한 지원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퍼지셋 질적비교방법은 연구자가 선정한 원인조건이 무엇인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진다. 그런데,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정책들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즉, 이 연구는 가족정책을 현금, 서비스, 휴가지원으로 나누어 9가지의 정책을 포함했는데 각각 포함되는 정책의 기준이 일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휴가정책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값을 각각 반영하기 위해 현금, 서비스지원 정책에 비해서는 더욱 많은 수의 지표가 포함되었다. 또한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실제로 가족정책 이외에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이라는 원인 이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갖춰 아동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 때 가족정책으로 포함할 수 있는 원인조건 또한 이론적인 틀을 갖추어 현금, 서비스, 휴가지원에 해당하는

정책을 균형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과변수에 해당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량’의 데이터는 199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수집되었다. 이는 시간 측면의 아동 삶의 질에 있어서는 국가에 따라 최대 20년 이상 오래된 데이터로 분석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원인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정책의 지표는 2017년부터 2020년으로 최근에 조사되었으며 데이터의 조사 연도가 모든 국가에서 결과변수가 원인변수에 비해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결과가 가족정책의 지표에 따라 발생한 차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우선 이 연구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족정책에 아동중심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며,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의 실효성을 밝힌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퍼지셋 질적비교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아동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결합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높은 아동 삶을 설명하기 위해 단일한 가족정책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가족정책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합을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공인숙, 김선영(2012). 한국의 아동 웰빙 지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아동 웰빙 지표의 영역과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33**(1), 183-203. https://doi.org/10.5723/KJCS.2012.33.1.183

김교성, 유희원(2015). 복지국가의 변화: 신·구 사회정책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 **사회복지연구, 46**(1), 433-467. https://doi.org/10.16999/kasws.2015.46.1.433

김미숙, 김효진, 김안나(2018). 아동의 삶의 질 수준 국제비교와 놀이와 여가활동의 영향 연구. **유라시아연구, 15**(3), 29-59. https://doi.org/10.31203/aepa.2018.15.3.002

김병섭(2010). **편견과 오류 줄이기.** 법문사.

김신영, 백혜정(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김지현(2020).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결합요인 분석: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한 국제비교연구. **비판사회정책,** (66), 45-92. https://doi.org/10.47042/ACSW.2020.02.66.45

김진욱, 최영준(2012). 일-가족 시간배분에 따른 가구유형과 변화-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4**(2), 31-54. https://doi.org/10.20970/kasw.2012.64.2.002

민기채(2014).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사회과학적 활용 : Stata를 활용한 Y-검증과 N-검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44), 223-259. https://doi.org/10.17939/hushss.2014..44.008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법제처(2019). 영국, 호주, 싱가포르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 고찰. **세계법제정보센터,** 1-23.

안상훈(2002). 세 가지의 복지자본주의에서의 생산적 복지, 그 성적표 복

지국가의 경제적 효과와 평등달성의 차이에 관한 체제론적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162-189.

안세아(2020). 가족정책의 변화에 따른 복지체제의 재구성.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3), 127-141.

안승재(2021). 가족정책의 다차원적 효과 -가족정책과 가치관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8**(2), 189-224. https://doi.org/10.16975/kjfsw.68.2.7

여성가족부(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유계숙(2007). 기업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도입 및 활용의 결정요인 분석. **노동리뷰**, (33), 37-51.

우영지, 이기학(2018). 취업모의 다중역할수행 대처전략에 따른 다중역할 경험 및 태도수준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3**(4), 685-713. https://doi.org/10.18205/kpa.2019.23.4.007

이승윤(2014).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Fs/QCA 입문**. 고려대학교 출판부.

정진화, 김현숙, 임지은(2019).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Becker 및 Easterlin 가설 검증과 가족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재정학연구, 12**(4), 1-47.

진미정(2012). OECD Family Database 지표 분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범위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97-207.

진미정(2015). 한국가족정책의 특수성과 과제: 미시공공성과 공동체성. **한국가족을 말하다: 현상과 쟁점** (75-97). 하우.

최영준(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3), 307-336.

한신실(2020).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성장해왔는가?. **한국사회정책, 27**(1), 153-185. https://doi.org/10.17000/kspr.27.1.202003.153

홍승아(2010).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스웨덴, 영국, 한국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16,** 66-71.

황은정, 장혜림(2015).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정책 유형과 아동웰빙의 관계 -지출수준과 급여균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2), 163-207.

황인영(2021). **NIS 관점에서의 국가 R&D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Adema, W., & Fron, P. (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https://www.oecd.org/social/soc/SOCX_Manuel_2019.pdf

Andrews, F.M., & Withey, S.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Plenum Press.

Baker, M., Gruber, J., & Milligan, K. (2008). Universal child care, maternal labor supply, and family well-be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4), 709-745. https://doi.org/10.1086/591908

Barbier, J. (1990). Comparing family policies in Europe: Methodological problem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43*(3), 326-341. https://doi.org/10.1111/j.1468-246x.1990.tb01038.x

Baxter, J., & Smart, D. (2011). Fathering in Australia among couple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Research highlights. *Family Matters, 88*, 15-26.

Ben-Arieh, A., Casas, F., Frønes, I., & Korbin, J. E. (2014). Multifaceted concept of child well-being. In *Handbook of child well-being: Theories, methods and policies in global perspective* (pp. 1-27).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0-481-9063-8_134

Berger, L., & Carlson, M. (2020). Family policy and complex contemporary families: A decade in review and implications for the next decade of research and policy practi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 478-507. https://doi.org/10.1111/jomf.12650

Bradbury, B., & Jäntti, M. (1999). Child Poverty across industrialized nations. *Innocenti Occasional Papers: Economic and Social Policy Series, 71*. UNICEF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Centre.

Bradbury, B., & Jäntti, M. (2001). Child poverty across the industrialized world: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In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pp. 11-32). Policy Press.

Bradshaw, J., Ditch, J., Holmes, H., & Whiteford, P. (1993). *Support for Children: A comparison of arrangements in fifteen countries*. The Stationery Office.

Bradshaw, J. (2006). Child support and child poverty. *Benefits, 14*(3), 199-208.

Bradshaw, J., Keung, A., Rees, G., & Goswami, H. (2011).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4), 548-556.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0.05.010

Bradshaw, J., Martorano, B., Natali, L., & de Neubourg, C.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Child Indicators Research, 6*(4), 619-635. https://doi.org/10.1007/s12187-013-9196-4

Bradshaw, J. (2014). Overview: social policies and child well-being. In *Handbook of child well-being: Theories, methods and policies in global perspective* (pp. 2921-2943).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0-481-9063-8_117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The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https://doi.org/10.1037/0003-066x.34.10.844

Burnett, K., & Farkas, G. (2009).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effects on children's mathematics achievement: Estimates from random and fixed effects models. *The Social Science Journal, 46*(2), 297-318. https://doi.org/10.1016/j.soscij.2008.12.009

Castro-García, C., & Pazos-Moran, M. (2016). Parental leave policy and gender equality in Europe. *Feminist Economics, 22*(3), 51-73. https://doi.org/10.1080/13545701.2015.1082033

Chandy, L., Marlin, A., & Teixeira, C. (2021). *Understanding child subjective well-being: A call for more data, research and policy making targeting children.* UNICEF Office of Global Insight & Policy.

Collison, D., Dey, C., Hannah, G., & Stevenson, L. (2007). Income inequality and child mortality in wealthy nations. *Journal of Public Health, 29*(2), 114-117. https://doi.org/10.1093/pubmed/fdm009

Cooper, K., & Stewart, K. (2021). Does household income affect children's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Child Indicators Research, 14*(3), 981-1005. https://doi.org/10.1007/s12187-020-09782-0

Cummings, E. M., & Davies, P.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Guilford Press.

Daly, M., & Ferragina, E. (2018). Family policy in high-income countries: Five decades of developmen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8*(3), 255-270. https://doi.org/10.1177/0958928717735060

Duncan, S., & Irwin, S. (2004). The social pattering of values and rationalities: Mother's choice in combining caring and employment. *Social Policy and Society, 3*(4), 391-399. https://doi.org/10.1017/s1474746404002076

Duncan, G. J., & Murnane, R. J. (2016). Rising inequality in family incomes and children's educational outcomes. *RSF: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2*(2), 142-158. https://doi.org/10.7758/rsf.2016.2.2.06

Duncan, G. J., Magnuson, K., & Votruba-Drzal, E. (2017). Moving beyond correlations in assessing the consequences of pover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8*(1), 413-434.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10416-044224

Engster, D., & Olofsdotter Stensöta, H. (2011). Do family policy regimes matter for children's well-being? *Social Politics, 18*(1), 81-124.

European Commission. (2017).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2021). *The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European Child Guarantee.* European Commission.

Ferrarini, T. (2006). *Families, states and labour markets: Institutions, causes and consequences of family policy in post-war welfare states.* Edward Elgar Publishing.

Flaquer, L. (2014). Family-related factors influencing child well-being. In *Handbook of child well-being: Theories, methods and policies in global perspective* (pp. 2229-2255).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0-481-9063-8_87

Fleckenstein, T., & Lee, S. C. (2017). The politics of investing in families: Comparing family policy expansion in Japan and South Korea.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4*(1), 1-28. https://doi.org/10.1093/sp/jxw008

Gauthier, A.H. (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Clarendon Press.

Gauthier, A. H., & Koops, J. C. (2018). The history of family policy research. In *Handbook of Family policy* (pp. 11-23). Edward Elgar Publishing. https://doi.org/10.4337/9781784719340.00009

Gligor, D., & Bozkurt, S. (2020). FsQCA versus regression: The context of customer engagement.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52*, 1019-1029.

González, L. (2013). The effect of a universal child benefit on conceptions, abortions, and early maternal labor suppl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5*(3), 160-188. https://doi.org/10.1257/pol.5.3.160

Gornick, J., & Jäntti, M. (2010). Child Poverty in Upper-Income Countries: Lessons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In *From child welfare to child well-being* (pp. 339-368).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0-481-3377-2_19

Gornick, J. C., & Meyers, M. K. (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Russell Sage Foundation.

Grant, J., Greene, K., & Maxwell, D. K. (2004). The planning and policy implications of gated communities.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13*(1), 70-88.

Haider, A. (2021). *The basic facts about children in poverty.*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rneiro, P. M., & Heckman, J. J. (2003). Human capital policy.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 Discussion Paper, 821.* http://doi.org/10.3386/w9495

Heymann, J. (2006, May 14). *We can afford to give parents a break.*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opinions/2006/05/14/we-can-afford-to-give-parents-a-break/b543f573-c96c-453e-8829-047633e37df1/

Hoffmann, S., Sander, L., Wachtler, B., Blume, M., Schneider, S., Herke, M., Pischke, C. R., Fialho, P. M. M., Schuettig, W., Tallarek, M., Lampert, T., & Spallek, J. (2022). Moderating or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haracteristics on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child health in high-income countries - a scoping review. *BMC Public Health, 22*(1), 1-14. https://doi.org/10.1186/s12889-022-12603-4

Hook, J. L.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https://doi.org/10.1177/000312240607100406

Huerta, M., Adema, W., Baxter, J., Han, W. J., Lausten, M., Lee, R., & Waldfogel, J. (2013). *Fathers' leave,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 development: Are they related? Evidence from four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40.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5k4dlw9w6czq-en

Immervoll, H., Sutherland, H., & de Vos, K. (2000). *Child poverty and child benefits in the European Union.* EUROMOD Working Paper No. EM1/00.

Kamerman, S. B., & Kahn, A. J. (1976). Explorations in family policy. *Social Work, 21*(3), 181-186. https://doi.org/10.1093/sw/21.3.181

Kamerman, S., & Kahn, A. (1979).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3), 674-675. https://doi.org/10.2307/351644

Kamerman, S. (2009).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Developing and holistic family policy agenda. *Hong Kong Journal of Pediatrics, 14*(2), 115-121.

Keyes, C. L., Shmotkin, D., & Ryff, C. D.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1022. https://doi.org/10.1037/0022-3514.82.6.1007

Kooreman, P. (2000). The labeling effect of a child benefit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90*(3), 571-583. https://doi.org/10.1257/aer.90.3.571

Kvande, E., & Brandth, B. (2017). Individualized, non-transferable parental leave for European fathers: migrant perspectives. *Community, Work & Family, 20*(1), 19-34. https://doi.org/10.1080/13668803.2016.1270258

León, M., & Migliavacca, M. (2013). Italy and Spain: Still the case of familistic welfare models? *Population Review, 52(1)*, 25-42. https://doi.org/10.1353/prv.2013.0001

Lewis, J. (1997). Gender and welfare regimes: Further thought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4*(2), 160-177. https://doi.org/10.1093/sp/4.2.160

Loeb, S., Bridges, M., Bassok, D., Fuller, B., & Rumberger, R. W. (2007). How much is too much? The influence of preschool center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6*(1), 52-66. https://doi.org/10.3386/w11812

Lundberg, S., Pollak, R. A., & Stearns, J. (2016). Family inequality: Diverging patterns in marriage, cohabitation, and childbear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0*(2), 79-102. https://doi.org/10.1257/jep.30.2.79

Lynch, J., Smith, G. D., Hillemeier, M., Shaw, M., Raghunathan, T., & Kaplan, G. (2001). Income inequality, the psychosocial environment, and health: comparisons of wealthy nations. *The Lancet, 358*(9277), 194-200. https://doi.org/10.1016/s0140-6736(01)05407-1

Macinko, J. A., Shi, L., & Starfield, B. (2004). Wage inequality, the health system, and infant mortality in wealthy industrialized countries, 1970-1996. *Social science & medicine, 58*(2), 279-292. https://doi.org/10.1016/S0277-9536(03)00200-4

Martorano, B., Natali, L., De Neubourg, C., & Bradshaw, J. (2013). Child well-being in economically rich countries: Changes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Working Paper WP-2013-02.* UNICEF Office of Research.

Milligan, K., & Stabile, M. (2009). Child benefit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health: Evidence from Canadian child benefit expan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9*(2), 128-132. https://doi.org/10.1257/aer.99.2.128

Misra, J., Moller, S., & Budig, M. J. (2007). Work-family policies and poverty for partnered and single wome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Gender & Society, 21*(6), 804-827. https://doi.org/10.1177/0891243207308445

Moreno Minguez, A. (2017). The role of family policy in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variation in chil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4*(3), 1173-1194. https://doi.org/10.1007/s11205-016-1456-5

Muntaner, C., Lynch, J. W., Hillemeier, M., Lee, J. H., David, R., Benach, J., & Borrell, C. (2002). Economic inequality, working-class power, social capital, and cause-specific mortality in wealthy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32*(4), 629-656. https://doi.org/10.2190/n7a9-5x58-0dyt-c6ay

Navarro, V. (2004).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of health.* Baywood Pubublishing Company.

Navarro, V., & Shi, L. (2001). The political context of social inequalities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31*(1), 1-21. https://doi.org/10.2190/1gy8-v5qn-a1ta-a9kj

Nordenmark, M. (2021). How family policy context shapes mental well-being of mothers and fathe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8*(1), 45-57. https://doi.org/10.1007/s11205-021-02701-y

OECD. (2022a).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Data set].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 (2022b). OECD Family Database [Data set].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OECD. (2022c).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Data set]. https://www.oecd.org/els/family/child-well-being/data/

Olivetti, C., & Petrongolo, B. (2017).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family policies: lessons from a century of legislation in high-income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1), 205-30. https://doi.org/10.1257/jep.31.1.205

Panico, L., & Kitzmann, M. (2020). Family policies and child well-being. In *Handbook on Society and Social Policy* (pp. 356-371). Edward Elgar Publishing. https://doi.org/10.4337/9781788113526.00035

Pollard, E. L., & Lee, P. D. (2003). Chil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1), 59-78. https://doi.org/10.1023/A:1021284215801

Ragin, C. C. (1987).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agin, C.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agin, C. C., Drass, K., & Davey, S., (2006). *User's Guide to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University of Arizona.

Ragin, C. C. (2008). Measurement versus calibration: A set-theoretic approach.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Methodology* (pp. 174-198).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286546.003.0008

Rees, G., Savahl, S., Lee, B. J., & Casas, F. (2020). *Children's views on their lives and well-being in 35 countries: A report on the Children's Worlds project, 2016-19.* Children's Worlds Project(ISCWeB).

Rosenzweig, M. R., & Schultz, T. P. (1982). Market opportunities, genetic endowments, and intrafamily resource distribution: Child survival in rural Indi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2*(4), 803-815.

Rostgaard, T. (2014). Nordic care and care work in the public service model of Denmark: Ideational factors of change. *The transformation of care in European societies,* 182-207.

Ruhm, C. J. (2000). Parental leave and child healt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9*(6), 931-960. https://doi.org/10.1016/S0167-6296(00)00047-3

Sainsbury, D. (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naka, S. (2005). Parental leave and child health across OECD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115*(501), 7-28. https://doi.org/10.1111/j.0013-0133.2005.00970.x

UNICEF. (2005).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Excluded and invisible*. https://doi.org/10.18356/198d96de-en

UNICEF. (2013).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Innocenti Report Card 11.*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https://doi.org/10.18356/0aea8e54-en

Washbrook, E., Gregg, P., & Propper, C. (2014).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come and multiple child outcom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77*(4), 757-782. https://doi.org/10.1111/rssa.12074

Wennemo, I. (1993). Infant mortality, public policy and inequality-a comparison of 18 industrialised countries 1950-85.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15*(4), 429-446. https://doi.org/10.1111/j.1467-9566.1993.tb00354.x

Wesolowski, K., & Ferrarini, T. (2018).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Examining the link between family policy institutions and fertility rates in 33 countries 1995-2011.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8*(11/12), 1057-1070. https://doi.org/10.1108/IJSSP-04-2018-0052

Winegarden, C. R., & Bracy, P. M. (1995). Demographic consequences of maternal-leave programs in industrial countries: Evidence from fixed-effects models. *Southern Economic Journal, 61*(4), 1020-1035. https://doi.org/10.2307/1060738

Zimmerman, S. (1988). *Understanding family policy: Theoretical approaches.* SAGE.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Policy and Children's Quality of Life among OECD countrie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Park, Jeongm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amily is a microsystem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ildren's growth as independent members of society. The state can improve family environment and condition through family policy, as part of a major macrosystem that supports children's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policy and children's quality of life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to determine which combination of factors in family policy can explain children's quality of life.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s "Which family polices are related to children's quality of life in terms of health, economy, and time?", and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s "How can family

policies be combined to improve children's quality of life in terms of health, economy, and time?" Family policy includes (1) child-related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2) family cash benefits for two-parent (dual-income) families, (3) public expenditures on servic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4)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5) public expenditures on maternal and paternal leave, (6) average payment rate across paid leave for the mother, (7) full-rate equivalent weeks across paid leave for the mother, (8) average payment rate across paid leave for the father, and (9) full-rate equivalent weeks across paid leave for the father.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quality of life include (1) low birth weight, (2) infant mortality, (3) child poverty, (4) mother's time spent with children, and (5) father's time spent with children.

Using OECD Family Database, OECD Child Well-Being Data, and 2014 Time Use Survey,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fsQCA) was used among 20 OECD countries. Since fsQCA assumes joint causal system that allows the interactions between each family policy indicator, it can verify the causal complexities of conjunctural caus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hild poverty was found to be the only factor that served as a significant necessary condition of family policy. It indicates that countries with high rates of child poverty had 1) high family cash benefits for two-parent dual-income families and 2) high public expenditures on maternal and paternal leave, in common. The sufficient condition of family policy explaining the children's quality of life were as follows:

In terms of **children's health**, when the state actively provide support for the family services,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and the average payment rate of paid leaves, it led to the country's low rate of low birth weight. In addition, if the full-rate equivalent weeks across paid leave for mother are short, the condition of high average payment rate across paid leave for father, state's active support for financial benefits, family service, and parent's leave are needed. On the other hand, if the full-rate equivalent weeks across paid leave for mother are short, and the support for child-related cash transfers and family cash benefits on a dual income family is low, both average payment rate across paid leave for mother and father should be high, and the active support for public expenditure on servic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and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is also necessary. Lastly, even when the support for father's average payment rate across paid leave and full-rate equivalent weeks across paid leave is low, when the child-related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is high, and the support for public expenditure on servic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and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are all active, the low birth weight rate resulted in low, regardless of the support for mother's leave. And for infant mortality, rather than supporting father's leave, active support for public expenditure on servic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and long full-rate equivalent weeks across paid leave for mother are needed.

In terms of **children's economy**, if state provides active support for mother's leave, the high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turned out to be important rather

than the support for child-related cash transfers, and family cash benefits on a dual income family. Conversely, if the state provides active support for father's leave, the combination should include active support for child-related cash transfers, and family cash benefits on a dual income family. Moreover, even when both mother and father receive low support for their leaves, combining high family cash benefits for two-parent (dual-income) families, high average payment rate across paid leave for father, support for public expenditure on servic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and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can result in low child poverty.

In terms of **children's time**, significant combination was derived only from the amount of time spent with fathers. These results can demonstrate that family policies have more influence on the father's time with his children than on the mother's. However, it can rather also be translated that OECD countries' currnet level of support for the family policy is not enough to increase the time spent with the mother. For the time spent with fathers, the combination of state's active support for father's long full-rate equivalent weeks across paid leave and all other family policy, including cash, service, and leave supports, leads to higher amount of time spent with fathers. Furthermore, when mothers have low average payment rate across paid leave and short full-rate equivalent weeks across paid leave, but fathers have high average payment rate across paid leave, with the active support for public expenditure on services for families,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and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it result in longer

time children spend with their fathe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as following. First, this study 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policy and the children's quality of life, which supports the effectiveness of state's investment in family policy.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d child-centered implications for family policy. Furthermore, by using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this study emphasized the configurational approach, showing how each family policy can combine and improve the quality of children's lives. This is to say, this study revealed that it is not a single policy that improves the children's quality of life, but various combinations of policy since family policies interact with each other.

keywords : family policy, children's quality of life,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comparison,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Student Number : 2020-26643